

코로나19 시대의 세계질서 변화와 디지털 리더십

정성영



본 보고서는 ETRI 기술정책연구본부 주요사업인 "국가 지능화 기술정책 및 표준화 연구"를 통해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핵심 요약	1
I. 연구 개요	3
II. 세계질서 재편의 작용력	6
1. 세계질서를 요동치게 하는 3가지 힘	6
2. 3가지 힘의 작용 방향	7
3. 세계질서 시나리오	10
III. G2 시나리오 전개 방향과 영향	16
1. 마중 충돌의 확산	16
2. 마중 충돌의 파장: 세계질서 변화의 조짐	27
3. G2 파트너로서 유럽과 아시아	33
4. 커지는 코로나19의 영향력	39
IV. 디지털 리더십과 역할: 전환을 위한 준비	44
1. 디지털 리더십의 중요성	44
2. 디지털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요구	46
3. 디지털 리더십의 역할과 지향점	49
IV. 시사점	65
참고문헌	68

핵심 요약

사실상 경쟁할만한 대안적 체제가 없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불확실성과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사회 충돌과 혼돈이 어떻게 귀결될지에 대한 논의가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거대한 혁명의 바람을 품고 있는 기술 중심의 논의는 부족하다. 대부분 국제정치학이나 지리경제학적 관점을 기초로 국가의 위치설정(positioning)과 협상전략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인해 점점 굳어지는 듯한 세계질서의 양강구도는 다른 나라들의 지위를 더 약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심지어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한 진영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빠르게 정보가 유통 및 공유되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기계로 대체되고 기계가 인간사회에 끼어드는 세상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국력은 어느 날 갑자기 퇴색해버릴 수 있다. 한 국가가 디지털 기술로 개인과 사회의 모습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주체들을 지켜내는 기술의 힘이 점차 새로운 국력을 상징할 것이다.

코로나19와 세계질서의 변화, 디지털 전환이 공유하는 지향점이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바뀌는 혁명적 시대의 도래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규범과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에는 ‘자유와 통제 사이에 새로운 균형’이 생성될 것이며, ICT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이 바로 이 새로운 균형을 끌어낼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ICT가 선전하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위기 극복과 미래 사회 주도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전환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앞으로 정부가 새롭게 정해야 할 정책 기조로서 ‘디지털 리더십’을 제시하고, 이것이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그리고 선도적인 미래 사회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와 디지털 리더십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안한다.

디지털 리더십은 경영학적 관점의 전통적인 리더십과 차이가 있다. 디지털 기술 역량은 기업의 경쟁우위, 경쟁에서 이기는 생태계, 국가의 물리력 등 하나의 경제주체가 생존하고, 번창하고, 경쟁자를 이겨내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래 사회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인류가 계속해서 공존해가는 방식을 선도하는 정부·기업·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포괄한다.

개념 제안단계에 불과하지만,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미·중 양강구도에만 매몰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 역사 속의 팬데믹이 그랬듯이 코로나19는 기존의 질서를 깨뜨릴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미·중 충돌이 이데올로기와 체제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결국 ‘경쟁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라는 전략이 드러났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양국의 견제가 치열한 가운데 디지털 기술과 산업을 견제 도구로 활용하여 다른 나라들을 구속하는 양상까지 보인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디지털 리더십은 안보와 경제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세계질서 변혁기에 ICT로 국민과 기업을 지키고 누구에게나 선택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한 결과로 6가지의 국가적인 디지털 리더십 역할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리더십은 미래 사회 주도력에 대한 기술적 관점의 제안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변화무쌍하게 전개될 G2 패권 경쟁과 진영 형성, 다자주의의 확대,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강력한 기회와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

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국제 규범마저 해체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갖기 위한 전략적 이슈를 제시하고자 함
- 코로나19와 미·중 충돌, 다양한 장벽이 일으키고 있는 세계질서¹⁾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디지털 혁신이 인류를 희망적인 미래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함
- 과학기술 및 사회경제적으로 인류는 분명히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지금의 혼돈과 분쟁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이끌 국가적 추동력으로서 디지털 리더십의 개념을 설계(design)하고 그 역할을 제안함

2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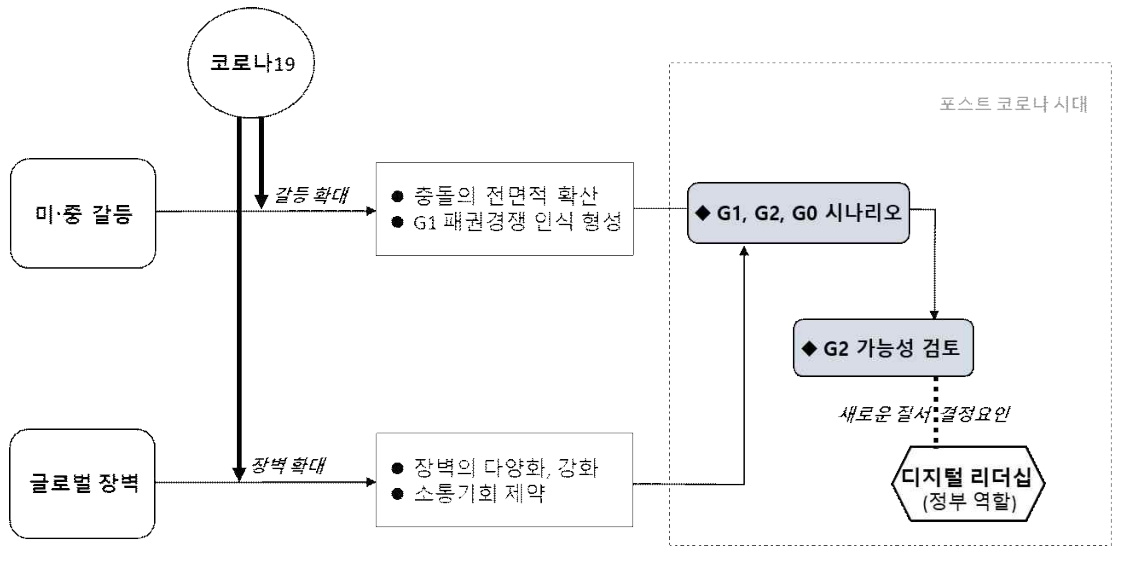
-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질서 변화요인을 3가지로 정의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파악
 - (코로나19) 인류 역사를 바꾼 흑사병, 스페인 독감 등과 같은 팬데믹 수준으로 지구촌을 요동치게 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글로벌 장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경제·산업 분야를 넘어 전방위적으로 확대
 - ※ 무역·산업적인 갈등이 점차 이념(Ideology)과 체제(System) 간 대립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지구촌은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2개의 세계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는 이러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킴
 - (글로벌 장벽) 난민 문제와 민족주의 포퓰리즘 등으로 높아지던 국가 간 물리적 장벽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사회·개인 간 다양한 갈등 요소가 있는 디지털 장벽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와도 맞물리고 있음
 - 현재 코로나19는 지구촌의 모든 경제주체(국가·기업·개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의 국제질서(국가 간 질서) 전반에 걸쳐서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

1) 일반적으로 세계질서는 국가 외의 주체까지 포함하는 질서를 의미하며, 국제질서는 나라(통합주권국가) 간 질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세계질서와 국제질서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함



- 국가 간 국제질서 시나리오는 G1(단일 패권), G2(양강 체제), G0(분권 체제)를 검토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이 세계질서를 양분하는 G2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G2 패권 경쟁 양상과 이에 대한 영향을 살펴봄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무역과 산업, 인권을 넘어 이데올로기와 국가체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양국이 취하는 조치들이 점점 더 격화되고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임
- 유럽은 분열되고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문화적인 자긍심까지 약화
- 아시아는 경제 규모나 지정학적,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중요한 협력 상대로 부상하였으나, 안보와 경제 문제가 얽히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항할만한 정도는 아님

그림 1 연구체계: 코로나19가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리더십



-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세상은 기존의 질서로 회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는 길에는 디지털 기술혁신을 축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디지털 리더십을 개념화
- 현재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3가지 힘(코로나19, 미·중 충돌, 장벽)과 ICT 기술혁신으로 진전되는 디지털 전환은 궁극적으로 이전 시스템 복원과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문제를 야기

- 새로운 세계질서는 코로나19와 디지털 기술이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복원과 전환’, ‘자유와 통제 간 새로운 균형’을 형성해 갈 것이며, 역사적으로 혁신기술은 이전의 질서를 파괴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디지털 리더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든 시스템의 전환역량’으로 정의
- 인간성의 지탱과 인권 및 인류문화, 국가체제의 존속과 지구촌 공존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치유와 복원력(resilience)이 작용하겠지만,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세상이 국가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리게 되면 디지털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질 것임
- 국가가 중추로 추진해야 할 6가지 디지털 리더십으로 디지털 기술 주권 확립, 과학 기술 경쟁력 배양, 디지털 핵심(King pin) 산업 확보, 세계 디지털 전환 협력 주도, 글로벌 디지털 공공재 이슈 선점, 국제기구 및 협력체 활용역량 강화 등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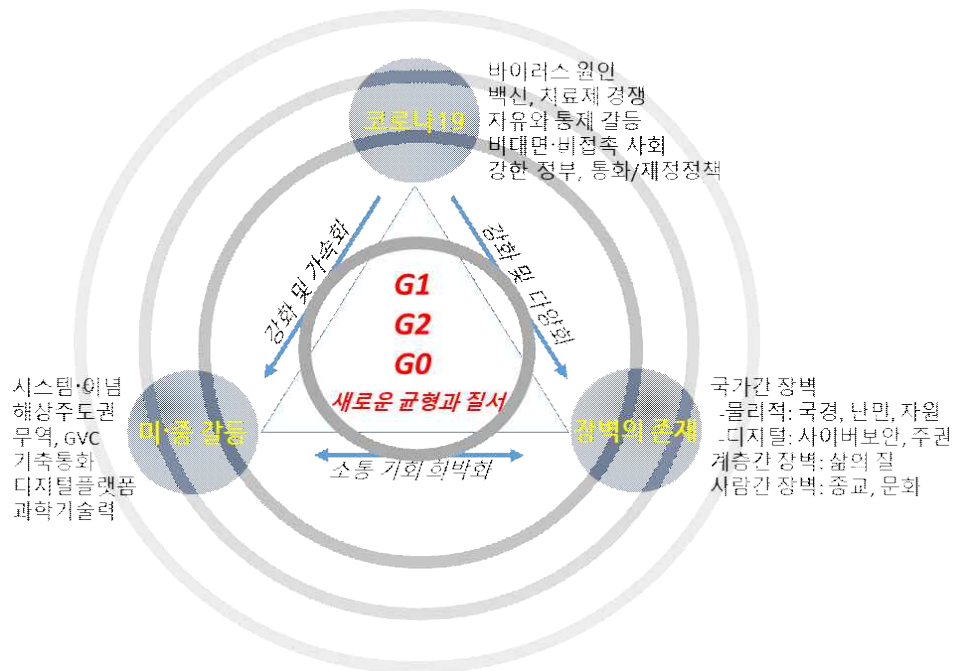


II 세계질서 재편의 작용력

1 세계질서를 요동치게 하는 3가지 힘

- 코로나19로 더욱 거세지는 변화의 바람
 - 코로나19는 미·중 무역 분쟁 속에 가려져 있던 내재적인 문제, 예를 들면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등 세계 경제의 중국 의존 문제를 급격히 증폭시켰으며, 이는 홍콩사태, 인권문제, 해상분쟁까지 갈등을 확장하고 있음.
 - 코로나19는 미·중 패권 경쟁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물리적 장벽까지 더욱 높게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여지를 더욱 희박하게 하고 있음
 - 당분간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가 어렵고 바이러스가 일상화된다면, 지구촌 갈등의 장벽이 높아진다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이데올로기에서 국가 시스템과 규범 전반에 이르는 경쟁으로 확대된다면 세계질서는 요동칠 수 있으며, 이는 전면적 군사 충돌과 문명 충돌까지 내포

그림 2 세계질서를 변화시키는 3가지 힘



2 3가지 힘의 작용 방향

-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된 현 상황에서 팬데믹 극복이 지구촌 최대의 당면과제
 - 조만간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장벽과 차별 없이 전세계가 신속하게 공유하지 못한다면, 현상계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음
 - 국가 및 모든 경제주체가 뒤엉켜 세계질서 자체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상황

※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WHO의 우려(The Guardian, 2020.9.16.)²⁾

Covid-19 세계보건기구(WHO) 특사는 세계가 아직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나바로(David Nabarro) 박사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 회의에서 이 상황을 "괴기하다(grotesque)"라고 묘사하며, 유행병에 관한 어떤 공상과학 소설보다도 훨씬 더 나쁘고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끔찍한 상황이고, 건강 문제가 너무 걸잡을 수 없게 되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단순히 경기침체가 아니라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 2배, 영양실조가 2배가 되고, 수억 개의 소규모 기업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다."

- 코로나19를 가장 강력한 질서 변화요인으로 보고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를 조만간 극복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세계의 현안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코로나19는 다른 이슈와 어떻게 결부되어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는가?
- 코로나19와 자본주의 위기
 -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계경제의 침체와 저성장은 시작되었으며, 성장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한계가 내재하고, 불평등과 실업 등 자본주의의 폐해가 만연
 -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
 - 근대 국가는 산업혁명의 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으나, 최근 수년 동안 악화일로였던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들이닥친 코로나19의 충격을 4차 산업혁명이 흡수하기는 쉽지 않음
 -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하고 세상의 노동자들 또한 철저히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

2) <https://www.theguardian.com/world/live/2020/sep/16/coronavirus-live-news-world-still-at-beginning-of-pandemic-who-covid-19-envoy-warns?page=with:block-5f61435b8f08bc8778ef1456#block-5f61435b8f08bc8778ef1456>



- 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에 의한 디지털 전환은 계속해서 인간의 노동가치를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
- 자본주의 생산시스템과 노동가치의 붕괴는 소비의 소멸로 이어지고 실물경제를 계속 악화시킬 것이며, 경제 역성장으로 인한 신용경색은 금융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책이 재정적자 위기와 국가 디폴트 사태를 일으킬 수 있음
 - World Bank는 2020년 초에 이미 세계의 부채 위기 가능성을 경고
 - 전세계 부채는 1970년대 이후 가장 빠르게 증가 중
 - 스페인, 이탈리아 등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와 인도, 브라질 등 경제 기반이 취약한 나라에서 코로나19는 더 치명적

■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인한 갈등의 세계화

- 군사력을 사용하는 패권 경쟁은 극단적으로 지구의 공멸 또는 세계질서의 대혼란을 의미하며,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은 모든 나라에 득이 되지 않는 최악의 선택
 - 전면전이라는 파국으로 가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느슨해질 수 있으며 국가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용하면서 병렬적인 다자간 협력관계(연횡: 連橫)³⁾가 새로이 형성 가능
 - 그러나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온당한 대가를 받는 것과, 그것으로 인한 혜택을 해당 국가와 미국이 공유한다는 인식은 점차 국가안보와 경제 문제를 더 복잡하게 얽히게 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간, 기업 간, 모든 것들의 연결(Networking) 능력”을 재검토할 것이며, 다른 나라에 대해 ‘확실한 줄서기(합종: 合從)’를 요구할 것임
 - 미국은 세계의 식량과 에너지(석유, 가스) 네트워크,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과 유통, GVC 등 지금까지 주도권을 행사해 올 수 있었던 힘을 재정비
 - ※ 예를 들면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중동의 에너지 수송과 직결되고, 기축통화의 근간인 석유결제 수단을 지키는 일, 중국 제조를 우회하는 아시아 국가와 연계 강화와도 관련

3) 우리나라는 다자안보 체제도 필요. 김예경(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미·중 갈등 현황과 한국의 대응 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세미나, 2020.7.28. 참조

- 중국은 '세계의 제조업, 세계의 공장'으로서 협상력과 일대일로, 중국제조 2025, 구매력 등을 활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
 - ※ 중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최근에는 BRI를 확장하여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의료 일대일로' '디지털 일대일로' 같은 형태로 소프트 투자 분야도 포함

● 미국과 중국의 타협 가능성

-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세계의 양분화,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GVC 분리는 마치 삼쌍둥이 분리와 같아서 잘못하면 둘 다 죽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며,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이 마·중 공생의 방법일 수 있음
 - ※ 마중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2020년도에 중국에 신규추가 투자를 한 기업으로는 테슬라, 허니웰, 월마트, 코스트코, 파파이스 등이 있으며, 이들은 중국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매출을 올리는 기업임
- 과거에 소련과 일본의 도전을 물리친 경험이 있는 미국은 '혁신 경쟁을 통한 중국과 통합 공존'을 시도할 수 있음⁴⁾
 -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심 혁신 경쟁 가능
 - 혁신경쟁을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제기한 정보수집과 기술습득 관련 불공정행위 해소,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 등에 글로벌 룰 확립이 필요
- 미국이 변함없이 미국식 가치(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투명성)를 지키면서 규칙기반 질서를 추구할 경우에는 중국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변화임

■ 높아지는 장벽

- 국가 간의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이 크지만, 경제주체 간의 세계질서와 사회질서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평가
 - 지배적인 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과 신자유주의 사조의 확산, 세계화의 진전,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감춰져 왔던 자본주의 폐해가 급속하고 심각하게 부각
 - 국가·기업·계층마다 갈등과 충돌이 심해지면서 경쟁자나 위협 인자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보호하려는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 디지털화로 인한 열린 소통이 격차를 더욱 실감 나게 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이기적 인 장벽 세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

4) 장윤중, "미중 충돌의 세갈래 길, 선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7.(vol.356)



- ‘자신’과 ‘타인’,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인간의 특성은 역사적으로 물리적 장벽을 높여 왔지만, 디지털 기술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장벽을 더 많이 만들고 정신적 영역으로까지 장벽을 확장
- 코로나19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DNA(Data, Network, AI) 영역에서 견제와 압박이 지속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파편화·진영화⁵⁾까지 우려
- 코로나19는 국경간, 지역간 사람의 움직임을 현저히 둔화시켰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소통을 방해
 -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생존력은 지역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동제한 행위를 정당화
 - 코로나19는 기존에 갈등이 존재했던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사람과 사람의 단절을 정당화하고 단절을 더 쉽게 만들고 있음
-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비접촉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과 관계 없는 정보 획득이 늘어나면서 격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상대적인 박탈감 등이 상승
 - 디지털 장벽은 기술적으로 철저히 보호될 수 있고, 그 장벽 안에서 기득권을 확보한 집단은 점점 더 기술성이 높은 보호막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디지털 장벽이 한 번 형성되면 물리적 장벽보다 무너뜨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3 세계질서 시나리오

■ 3가지 힘에 의한 새로운 세계질서 시나리오

- G1 시대: 미국 또는 중국 어느 한 나라가 패권을 차지. 이 경우 힘겨루기의 극단적 방법으로 전면적인 군사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음(투키디데스 함정⁶⁾)

5) 예로서 스플린터넷과 디지털플랫폼 양분화를 들 수 있다. 스플린터넷은 ‘스플린터(splinter)와 인터넷(internet)’의 합성어로 인터넷 세상이 쪼개지는 현상을 말하며,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터넷 망을 분리해내려고 하는 것을 지칭. 디지털 플랫폼 양분화는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으로 디지털 플랫폼(네트워크, OS, AI서비스 플랫폼 등)이 이원화될 수 있다는 의미임.

6) 미국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ison)은 자신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Destined for War, 2017)」에서 세계 곳곳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달고 있다고 분석했다. 앨리슨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술한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404)이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가 빚어낸 구조적 긴장 관계의 결과였다고 설명하고, 이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칭했다. 아울러 지난 500년간 지구에서 발생한 투키디데스 함정은 16차례였고, 이 중 12차례가 전면전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미·중 분쟁은 17번째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전면전 가능성은 ‘엄중한(grim)’ 단계라고 진단했다. 중국과 미국이 한 발짝 물러서지 않는 한 무역분쟁, 사이버 공격, 해상 충돌 등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 G2 시대: 미국이 중국의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면 양국 중심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새롭게 양대 진영이 형성되는 신 냉전⁷⁾ 시대에 돌입할 우려가 있으며, 패권 경쟁이 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디지털 플랫폼 이원화가 출현할 수 있음
- G0 시대: 과거와는 다른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통치 부담 및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특정 국가의 글로벌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세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⁸⁾, 국가간 장벽이 높아질수록 그 가능성이 커지고 새로운 자본주의사회 패러다임이 등장할 수도 있음

■ G1(Great 1)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결과로 둘 중 하나가 세계의 맹주가 되는 시나리오
 - 국제질서 및 세계질서의 대혼란을 초래하는 전면적 군사 충돌은 본 고에서는 논외로 함
- 당분간 미국이 G1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G2로의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건은 이 과정이 여하히 평화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인 지임
 - 현재는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논쟁 및 국가체제 논쟁까지 확대되는 위험한 상황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등을 둘러싼 갈등 등 확장되는 미·중 갈등과 경쟁구도는 장기적 패권 경쟁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 중국은 군사력, 산업경제, 과학기술, 국민 생활 수준과 문화 등 차례대로 모든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버틸 것으로 예상: 과학기술에 가장 큰 기대
 - 중국의 기술·산업 수준, 국제 영향력은 더 이상 미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이는 과거 냉전 시대의 소련, 1980년대의 일본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위협으로 인식
 - 코로나19는 국가시스템, 과학기술, 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서 ‘국격(National Dignity & Status)의 역전 또는 격차 축소 및 단축’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7) 미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는 40년의 국제협력력이 끝나고 새로운 냉전 1.5(Cold War 1.5)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

8) 미·중 갈등 속에서 글로벌 리더십 부재의 위험성은 흔히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으로 비유된다. 킨들버거 함정은 새롭게 부상한 패권국이 기존 패권국이 가졌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기를 뜻하는 말로, 미국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영국을 대체해 신흥 패권국이 된 미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한 데서 유래한다. 킨들버거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 나약해진 영국을 대신해 미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했음에도 고립주의를 택하면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국제무역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로 인한 혼란은 대공황을 야기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 중국의 승리 가능성
 -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선전·선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글로벌 리더로서 지위를 상실한 미국의 부재를 틈타(경쟁의 진공상태) 새로운 세계를 향한 질주를 펼치고 있어 미·중 관계가 재설정되고 있다는 평가⁹⁾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국보다 미국의 경쟁국이 더 중요해질 것이며 새로운 국제 정치 지형이 형성될 것
 - 코로나19 지원을 받는 유럽 국가들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글로벌 파워를 인정하면서 중국의 투자를 노리는 전략 구사
 -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대외 신뢰 상실은 ‘세계 정치 진공상태’를 만들었으며, 중국이 이를 채우기 위해 질주
 - 미국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최고경영자인 레이 달리오(Ray Dalio)는 미국이 달러가치 하락으로 쇠락하고 중국의 패권이 점차 부상할 것으로 예상
 - 대영제국과 네덜란드도 채무증가와 통화가치 하락 때문에 쇠퇴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기술혁신 측면에서 중국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함(단, 자본 시장 개방을 전제할 경우)
- 중국이 미국의 위협이 되기에는 충분하지만, 아직 국가 시스템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적극적으로 타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이 코로나19를 원만히 극복하지 못하면 중국이 G1으로 등극한다는 의견도 있음
 - 미국은 전방위 공세를 확장·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시간을 벌면서 부단히 힘을 축적
 - ※ 중국은 세계가 인류 운명 공동체로서 새로운 문명을 함께 창조하자는 식의 제안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할 것임¹⁰⁾

■ G2

- 미국과 중국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2강 체제에 진입하는 경우로, 다른 국가들이 양대 진영으로 나뉘거나 중국이 독립적인 초강대국이 되어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전략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9) Economy Insight(2020.8.1.), “미국 해체가 시작되다” (Die Zeit 2020년 25호 번역 기사)

10) KDI 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토론자료(2020년 6월 9일), “코로나19와 미중갈등, 그리고 한반도”

- 중국의 위협은 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일본의 경제적 도전 등과는 차별화되는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함
 - 1차 세계대전, 1930년대 대공황, 2차 세계대전,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훨씬 더 세계화가 진행되고 유기적으로 작동: 경제 및 교역, 금융, 산업 가치사슬, 이데올로기, 국가 시스템 및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작용
 - 디지털 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새로운 주도권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디지털 기술은 경제 충돌, 군사 충돌, 문명의 충돌, 이데올로기 충돌 모든 면에서 핵심 역량
 - ※ 디지털 기술이 체제선전(propaganda) 강화에 활용됨으로써 이데올로기 경쟁의 도구화 가능
-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국가로서¹¹⁾’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
 - 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¹²⁾의 사례와 같이 기술적 능력과 제조 능력이 있고, 시장 규모가 큰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필요하며, 유럽은 훨씬 자유롭게 양국과 선택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G2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인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 자체가 공세적 태도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가치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논리로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핵심 전략은 중국을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이는 일시적인 논쟁이 아니며, 여러 문서에서 중국을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중국의 문제를 더 부각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동참을 기대
- G0(G-Zero)
 - 코로나19의 여파, 지구촌 곳곳의 갈등, 러시아의 도전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다자간 복잡한 목적의 협력체 중심으로 세계가 작동되는 시나리오
 - 코로나19로 이동 제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민족주의 등 폐쇄적인 이기주의 등이 팽배해지면 미국과 중국 모두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고, 기존 국제 규칙과 관행 등 세계질서가 급격히 혼돈에 빠질 것으로 전망

11) 단일 국가의 힘으로, 또는 기업에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국가의 입장이라는 의미

12)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되었으며, 2020년 11월 15일 인도를 제외하고 최종 서명이 이루어짐



- 절대 강자가 없어질 수 있는 이유
 - 미국과 중국의 내재적 문제가 코로나19의 충격과 결합될 때, 양국 모두 파국을 맞을 수도 있고 세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음
 - (중국) 공산당 중심의 권위주의적 행정과 IT 기술을 활용한 통제로 체제 안정을 유지한다고 볼 때, 이 2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잃게 되면 국가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
 - 체제 이념과 가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막강한 군사력 유지도 중요함
 - IT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개방하고 연결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자체를 계속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미국과의 분쟁으로 외부(자유주의 국가)와 단절이 늘어날 경우는 고립되고 산업기반도 잃게 됨
 - (미국) 사회 계층화와 빈부격차, 인종차별 및 흑인 인권탄압, 불평등 문제 등으로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및 연합국가 체제에 필요한 애국심과 단합력 필요
 - 중국 제재 동참 요구와 방위비 분담 문제로 전통적인 우방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문제
 -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국내 경제를 잘 작동시키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대내외적으로 정치적인 신뢰와 통제력을 확보하는 결정적 방법
 - 다른 나라들은 미·중 협력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서 중국 리스크(China Risk)와 미국 리스크(America Risk)를 줄이는 전략도 필요함. 이러한 위험 회피전략이 늘어나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위상이 악화할 수밖에 없음
- G0는 가능성 희박한 것으로 평가
 - 디지털 플랫폼 경쟁을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면서 기술 강국으로서 압도적 지위 유지
 - 중국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과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 경쟁 지속
 -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다른 나라들은 국가안보 확보, 글로벌 협력 진영 참여, GVC 참여, 조건부 시장 제공 등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여러 국가가 힘을 모으기는 어려운 상황
 -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은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 노선을 구사 :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이 대표적이며,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등도 해당. 러시아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임

III

G2 시나리오 전개 방향과 영향

현재까지 마중 충돌에서 미국의 강력한 선공에 맞서는 중국의 스며드는 전략, 인내하는 전략이 관찰된다. 이렇게 중국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자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이데올로기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바로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G2 경쟁 구도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21세기의 시대적 음모론일 수도 있다. 그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결합한 힘의 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과 디지털 혁신은 제3의 새로운 힘을 잉태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전통적인 냉전 구도를 깰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유럽보다는 아시아의 상황이 낫다. 유럽의 전통과 정면 배치되는 통제는 정부의 역할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라별로 서로 다른 경제적 상황은 EU의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있다. 아시아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안보와 잠재력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그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

1 마중 충돌의 확산

■ 중국의 위상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

● 중국의 위상

- 2020년 현재 중국은 실질GDP(PPP 기준) 세계 1위 국가이자 세계 최대 무역국이며, 군비 지출, R&D 지출 및 국제 특허출원 측면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로 성장
- 중국의 거대한 국토와 인구, 1백만 명 이상의 해외 취업자, 연 1억4천만 명(코로나 이전)의 해외여행객, 전 세계 4만여 중국 기업인, 중국이 보유한 해외 자산과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2인자에 올랐던 소련이나 일본과는 질적으로 비교되지 않는 위상
- 중국인(기업)의 해외 진출과, 자금력, 학술활동, 미국 유학생(2018~2019년 37만명)만 보더라도 과거 냉전시대에서 사용한 봉쇄전략은 불가능함
- 중국은 일대일로(BRI) 전략을 통해 중국 제품 기업, 해외 일자리 등의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해 왔음
- 투자 및 지원을 통해 다른 나라가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일대일로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기술의 지배력을 강화
- 최근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중국의 양적인 성과가 질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중국이 국가체제 및 이데올로기의 정당성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임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

-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 인식

· 미국은 2017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같은 해 12월에 발표한 ‘국가 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통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

※ 역사의 변함없는 연속성은 힘의 추구(contest for power)이고 지금의 국제질서 특징은 경쟁이라는 현실 주의적 접근을 선택

· 군사-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제기되었던 관심 사항은 미국과 중국 간에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발발한다면 어느 나라가 승자가 될 것인가? 바람직한 동북아시아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등이었음¹³⁾

- 이후 미국은 ① 국방전략보고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년 1월), ② 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2018년 2월), ③ 2018, 2019 및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④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2019년 6월)¹⁴⁾, ⑤ 국무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2019년 11월) 등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음¹⁵⁾

- 2018년 1월 매티스 국방장관은 ‘국가 방위전략(「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을 발표하면서 향후 초점으로 미국에 대등한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에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방위전략 최우선순위가 대 테러리즘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되었음을 시사

- 백악관 보고서(2020.5) 이전의 경계심과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강조

· 중국은 냉전의 역사적 교훈을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 경쟁할 뿐만 아니라, 기술리더십에서도 미국을 능가하는 것이 목표

· 미국은 국제 경제, 금융, 기술 시스템의 규범 밖에 있으려는 중국 기업을 경계해야 하며, 미국은 정부, 학계, 기업이 충분히 참여토록 하여 경쟁에 대비할 것을 촉구¹⁶⁾

13) 이춘근,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KERI, 2012.11.

14) ‘중국 패리기’를 동맹국과 우호국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이 담김.

15) 김한권, “COVID-19 발생 이후 중국 외교정책의 현안과 미-중관계의 함의”, 외교안보연구소 주요 국제 문제분석 2020-24(2020.8)

- ※ 그 대책은 ①기초 R&D에 대한 연방 투자를 강화하고, ②STEM 분야에 대한 인적 자본의 유치 및 개발, ③통합된 국가 경제전략을 개발하고, ④기업과 자본시장의 장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
- ※ 과학과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는 미국이 냉전 시대에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경제적,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게 했다고 평가. 우주기술, 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처리, GPS, 암호 통신 및 전장 감시, 야간 투시, 스텔스, 정밀 유도 장비 등이 초강대국 미국을 이끌었음

■ 이데올로기 논쟁과 체제경쟁으로 진화

● 백악관 보고서(2020.5)의 중요성¹⁷⁾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5)」 골자

- 보고서는 중국(PRC: People's Republic of China)과 중국공산당(CCP: Chinese Communist Party)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국공산당은 특히 지난 20년간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질서를 이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국제 시스템을 재구성하려고 했음을 미국은 인정
-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권력의 확대는 국가로부터의 목인을 강요함으로써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해치고 전 세계 국가와 개인의 주권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음
- 중국의 도전에 대한 평가
 - 경제적 측면: 경쟁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의 규범과 관행을 내재화하지 않고 WTO 회원국의 혜택만 누리면서 국가 주도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추구해 왔으며, 정치 개혁은 위축되고 정부와 당 간의 구별은 약화
 - * 중국은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와 기술 라이선스 규제, 중국기업으로 하여금 미국기업의 첨단기술 획득하도록 촉구, 불법적인 사이버침해 자행 및 지원.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접근 등 불투명한 방식의 일대일로(OBOR: One Belt One Road) 추진 등을 지적
 - 미국의 가치에 대한 도전 : 시진핑이 강조한 ‘중국식 사회주의¹⁸⁾’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 민족주의, 일당독재, 국가주도 경제, 공산당에 의한 개인의 자유 속박 등이 특징이며,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선전·검열 기술 활용
 - * 소수민족 및 종교 탄압, 미디어 통제는 물론, 중국 공산당의 전위조직(CCP United Front)과 대리인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 기업, 대학, 싱크탱크, 언론인, 학자, 공무원 등을 포섭하고 활용
 - 안보 도전 :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상업과 공급망에 대한 도발이며, 동-남중국해, 대만해협, 중국-인도 접경 등에서 선제적이고 위협적인 군사준군사 행동을 전개
 - * 민군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전략에 따라 군대(인민해방군)가 민간 자원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며, 사이버보안법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의 보안 취약성을 유발하고 글로벌 IT 기술·산업

16) Michael Brown, Eric Chewing, and Pavneet Singh, "Preparing The UNITED STATES For The Superpower Marathon With CHINA", Global China, 2020.4.

17)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0, 202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Report-5.20.20.pdf>

18)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중국 공산당에 두 경쟁 체제 간의 "장기적인 협력과 갈등"을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



지배를 시도

-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에 있음을 인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미국의 국익을 방어해야 함
 -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법치(rule-of-law)와 법에 의한 지배(rule-by-law)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며, 테러 대응과 억압, 대의정치와 독재정치, 시장기반 경쟁과 국가주도 중상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함
 -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을 적시 : 무역과 투자, 표현과 신념의 자유, 정치적 간섭, 항해 및 비행의 자유, 사이버 및 기타 유형의 스파이 및 절도, 무기 확산, 환경 보호, 글로벌 건강 등
- 미국의 목표는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의 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
 -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 방식의 2가지 목표는 첫째, 중국이 제시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우리 기관, 동맹 및 파트너십의 탄력성을 개선하는 것, 둘째, 중국이 미국의 중요한 국익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중단하거나 줄이도록 강제하는 것임
 - 국가안보전략(NSS)의 4가지 축 이행 : (1) 미국 국민, 영토 및 생활 방식 보호 (2) 미국의 번영 촉진 (3) 힘을 통해 평화를 보존 (4) 미국의 영향력을 촉진
 - * 특징적 조치들 : 국방부는 수혜자들이 중국의 인재 채용 프로그램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노력,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집행 명령”과 “미국 통신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참여 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집행 명령”, “인공 지능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유지에 관한 집행 명령” 발표, 민감한 군사 및 정보 데이터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중국의 MCF 전략과 초음속,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생명공학을 비롯한 신기술기초 기술과 획득 시도를 고려한 수출 통제 규정 업데이트,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확립, 홍콩의 미래에 대한 관심 등

- 미국이 경제 충돌에서 이데올로기 충돌로 확전하는 계기가 됨
 - 지난 40여 년의 포용 정책이 중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전략적 경쟁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자인
 - 중국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몽’을 앞세워 중국주도 국제질서 형성과 내부 결속 도모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협력보다는 공개 압박과 봉쇄전략을 못 박은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평가
 - ※ (과거의 냉전과 유사점) 중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며, 이는 개인-사회-시장-국가에 대한 비전이 달라서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비전에 대한 전투라는 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나 법치주의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 또한 이념적 갈등이라는 점,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선전전(propaganda war)이 있다는 점

“자본주의는 사라질 것이고 사회주의는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2017년에는 중국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여 중국을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힘

- ※ (과거 냉전과 다른 점) 봉쇄전략은 실효성이 없음. 미국과 중국은 ‘초강력 마라톤(Ultra power Marathon)’에 진입했다고 평가되며, 이 경쟁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 같은 경제 및 기술 경쟁임. 이 경쟁은 군사, 외교, 이념 등 여러 지정학적 차원을 내포하지만, 경쟁의 핵심은 지리경제학 (geoeconomics)이며, 여기에 경제적 경쟁과 기술혁신의 초점을 두고 있음
- 미국 내에서는 미·중 갈등과 경쟁구도는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국가전략 경쟁으로서 진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
- 백악관 보고서(2020.5) 이후 동향 : 트럼프 행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직진
 -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주로 시민 수준(civil-level)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활동 전개
 - 이데올로기, 경제, 산업 스파이 활동, 시민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캠페인 등 중심
 - 주요 행정관리들이 행한 5개의 연설¹⁹⁾은 중국을 더 이상 자유로운 국가로 진화하는 국가로 보지 않으며,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²⁰⁾
 - ※ 5개의 연설에 담긴 중국의 위협
 - * 중국 공산당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규정, 정보 전쟁의 위험, 데이터 탈취 위험, 국제기구 활용전략, 사이버, 경제 스파이 행위, 해킹 및 학계 및 연구 활동 조작 적시

19) National Security Advisor Robert O'Bri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deology and Global Ambitions," Speech, Arizona Commerce Authority, Phoenix, Arizona, June 26, 20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chinese-communist-partys-ideology-global-ambitions/>
 FBI Director Christopher Wray, "The Threat Po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th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Speech, Hudson Institute, Washington D.C., July 7, 2020,

<https://www.fbi.gov/news/speeches/the-threat-posed-by-the-chinesegovernment-and-the-chinese-communist-party-to-the-economic-and-nationalsecurity-of-the-united-states>

Attorney General William Barr, "Remarks on China Policy," Speech, General R. Ford Presidential Museum, Grand Rapids, July 17, 2020.

<https://www.justice.gov/opa/speech/transcript-attorney-general-barr-s-remarkschina-policy-gerald-r-for-d-presidential-museum>

Secretary of State Michael Pompeo,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Speech, The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Yorba Linda, California, July 23, 2020,

<https://www.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

Secretary of State Michael Pompeo, Statement on "U.S. Position on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U.S. State Department, July 13, 2020,

<https://www.state.gov/u-s-position-on-maritime-claims-in-the-south-china-sea/>

20) 5개 연설문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Anthony H. Cordesman, "From Competition to Confrontation with China: The Major Shift in U.S. Policy", 2020.8.3. 참조.

<https://www.csis.org/analysis/competition-confrontation-china-major-shift-us-policy>



- * 가장 큰 장기적 위협은 정보 및 경제 스파이 행위, 개인정보 해킹,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rogram)과 같은 인재 채용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행위, 수출 통제 및 이해 상충 규칙 위반, 글로벌 경제 위협, 일대일로 및 중국제조 2025의 위협,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 식민주의적 방법 등을 지적
- * 디지털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통한 인프라 구축
- * 5G 글로벌 통신망, 인공지능, 기계학습 및 빅데이터 기술혁신 선도(2030년까지 AI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청사진: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Plan)를 위한 중국의 추진력과 배타적 계획
- * 소비자 가전산업에서 중요한 재료인 희토류 물질을 중국에 의존(미국 수입의 약 80%를 차지)
- * 소셜 네트워킹, 미디어를 활용한 광범위한 선전
- * 중국기업은 국가가 지원하므로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Huawei를 적시)
- * 중국의 경제 경쟁, 정보 전쟁 및 기타 방법으로서 시민 활동에 초점을 둔 경각심 등

■ 전방위적 충돌 발생

-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이 결부되어 불거지는 디지털 감시 정당화 논쟁
 - 미국이 중국을 경쟁상대로 선언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시장 경제(서방 세계)와 국가자본주의(중국) 간의 이념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미국은 CNP(Clean Network Program)²¹⁾ 추진으로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화웨이, 틱톡,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통신장비 및 인터넷 기업을 규제
 - 시진핑이 “현실 세계에서처럼, 가상 세계에서도 자유와 질서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듯이,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과정에서 그 ‘질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임
 - ※ 중국의 네트워크 보안은 기술적 완성이나 사이버 범죄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약화시킬지도 모르는 인터넷 기술의 역할을 의미한다는 게 일반적 평가
 - 중국은 2003년부터 황금방패(Golden Shield) 계획의 일환으로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국가 인터넷 검열시스템) 운영, 2009년부터 특정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실시
 - ※ 전국적인 통제력 유지와 정보 유통·이용 통제 목적이며 통합 통치를 위한 분리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
 - 중국 내 일원화된 통치를 위한 지배력 확보가 중요하고, 그것이 디지털 장벽으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스스로 디지털 장벽을 허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21) U.S. Department of the State, The Clean Network, <https://www.state.gov/the-clean-network/>

※ 예를 들면, 중국에서 위챗(Wechat)이 확산된 이유는 채팅 집단 내에서만 정보가 공유되어 분라·통제가 쉽기 때문이며, 모바일 페이가 확산한 것도 금융거래 감시 및 이를 통한 대한 감시 정보 확보가 쉽기 때문일 수 있음

● 남중국해 문제

-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국 당국자 등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중 회계협정 파기를 언급하는 등 충돌은 외교 분야를 넘어 경제·군사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3년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간에 체결된 MOU 파기가 임박하였음을 언급(2020.7.13. 미 국무부의 언론 인터뷰 보도)

※ 상기 MOU에 의해 중국 기업이 미국 회계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받아 왔으나, 파기 시에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

● 거래제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 가능성

- 현재 상무부의 Entity List에 오른 기업들을 향후 재무부 외국자산관리실(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SDN 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 올리고 금융제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SDN 리스트에 추가될 경우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가 금지되며, 이들 기업과 거래를 하는 해외 금융기관이나 기업도 제재대상이 되어 미국의 은행과 거래가 끊기게 됨. 단, 전면적인 금융제재가 실현될 경우 미국의 피해도 불가피하므로 향후 전개를 지켜 볼 필요가 있음²²⁾

● 투자 규제

-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첨단기술, 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의 M&A 및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소셜미디어 분야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 접근 가능성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시작²³⁾

- 최근에는 투자 이외에 사이버 보안, 통신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중국기업의 미국 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안보 위협행위 조사 및 영업 허가 거부조치를 취함으로써 견제를 확대

22) Washington Post(2020.5.28), "Bank Sanctions, delistings: U.S. poised to take financial fight to China"

23) The White House(2020.3.6), "Order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Stayntouch, Inc. by Beijing Shiji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
 -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당일 밤부터 즉시 시행
 -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사법 통치력이 강화되고 개인에 대한 감시 강화, 야권인사 탄압, 국민들의 시위 참여 금지, 언론 자유 축소 등이 가능해짐
 - 같은 날 미국 의회는 정치적 박해 위협에 처한 홍콩 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홍콩 피난처법’ 발의
 - 2020년 7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자치권 상실에 관여한 기관 등을 제재하는 ‘홍콩 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 및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
 - ※ 우리나라의 대 홍콩 수출규모는 2019년 기준 319억달러로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 수출 대상국임. 특히 수출 품목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9.8%에 달함²⁴⁾
-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2020.7.24.), 청두 미국 총영사관 폐쇄(2020.7.27.)
 - 미 국무부는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휴스턴 영사관 폐쇄
 - 중국이 중국인민해방군 출신의 학생들을 미국 대학에 파견하여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지휘하는 등 체제전복적인 행위에 개입한 전력이 있다고 발표
 -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군사적·전략적 의미가 큰 미국의 청두 총영사관을 폐쇄
 - 청두 미 총영사관은 중국 서부 지역에 최초로 개관한 외국 영사관으로 쓰촨성, 윈난성, 구이저우성, 티베트 자치구를 관할해 왔으며, 쓰촨성에서는 국영 군수기업이 다수 위치하고 있고, 이 영사관을 통해 티베트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음
- 화웨이 사태
 - 화웨이 사태의 의의
 - 글로벌 ICT 교역과 가치사슬에 큰 변화를 일으킬만한 파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이슈가 관련되고 무역분쟁 카드로 쓰였다는 점에서 ICT 기술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일어난-자유주의 교역질서를 흔드는- 상징적인 현재 진행형 사건
 - ※ 국익이 관련되는 한 국제 규칙이나 관행을 무시한 초법적이고 직권적인 조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유주의 질서 및 규칙 형성과 이행을 주도했던 미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24) 한국수출입은행,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와 미·중 갈등 심화”, 이슈보고서(2020.8)

- ※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는 기술 분야의 공급력을 내세워 수요자인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서 기술산업 가치사슬로 연결된 국가들의 동참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자유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국제질서를 악화시키는 것이 큰 문제
- 코로나19 확산 후 과격한 비난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다시 커지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 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²⁵⁾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 미국은 ‘수출관리법’을 이용하여 화웨이와 그 자회사를 거래제한 기업(Entity list)으로 지정하여 거래관계를 중단케 함으로써 중국의 기술패권(특히 5G, 휴대폰, 반도체 등) 도전을 견제
 - 2020년 5월 15일 화웨이 제재 강화 목적의 수출관리규정 개정안²⁶⁾ 발표
 - 미 상무부는 자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SW/HW)을 일정 부분 사용해 화웨이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2020.5.15.)
 - 화웨이는 자사 5G 통신장비에 보안 취약점이 없다는 내용의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으나(2020.5.), 미국은 외려 화웨이 제재 수위를 높이는 상황
- 중국은 미국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속속 발표²⁷⁾
 - 미국 기술을 우회하여 공급사슬에서 탈미국화를 시도한다는 난니완 계획(2020.8.)
 - 신시대 반도체²⁸⁾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정책 발표(2020.7.)
- 중국의 첨단기술 수출 금지²⁹⁾ 조치 : 중국 정부가 ‘데이터 분석 기반 개인 데이터 서비스 기술’을 수출 전에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첨단기술에 포함함으로써 틱톡의 미국 사업부문(바이댄스³⁰⁾) 매각에 제동이 걸림

25) 다만, 한시적으로 거래를 허가하는 일반 수출 라이선스는 2020년 8월 13일까지 연장(소비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소프트웨어 갱신과 통신 네트워크 유지 부문 등에 국한하여 한시적으로 거래제한 유보)

26) 미국 기술 및 부품 25% 미만 제품도 개발·제조에 미국의 기술 기반 장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정부 허가 필요

27) 양평섭, “미국의 탈중국화 전략과 중국의 대응”,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No.178(2020.11.6.)

28) 중국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2020년 8월에 국가 반도체 투자 기금(CICF) 2기 기금 조성을 발표

29) 중국 상무부·과기부는 ‘중국 수출 금지·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개정 발표(2020.8.). 개정안에는 총 4개 부문 53개 기술이 포함됐으며, 기존 수출 금지 4개 항목과 수출 제한 5개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에 수출 제한 23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됨. 새로 추가된 수출 제한·금지 목록에는 항공우주·레이저·유전자·드론·양자 암호·데이터 분석 등 대부분 중국이 최근에 성과를 낸 첨단기술임

30)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댄스 이용자 및 이용량이 급증했으며, 바이댄스의 2020년 1분기 매출은 400억 위안(약 7조원). 세계 최초로 헥토콘기업(기업가치 100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이 되었으며, 블룸버그는 바이댄스의 기업가치를 1000억 달러로 평가한 바 있음



- ※ 틱톡은 인도의 중국산 59개 앱 금지조치(2020.6.)와 미국의 틱톡 금지 논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미국 정부의 매각 명령에 따라 인수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
- 화웨이 사태의 여파로 우리나라 대 중국 무역의 핵심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화웨이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 발생
 -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규제로 인하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 중단을 선언(2020.9.10.)³¹⁾
- ICT 분야에서 가시화되는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 화웨이 제재가 반도체 등 미국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모습이며, 기술 디커플링 혹은 소·부·장 무기화의 대표 사례³²⁾
 - 미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18년 기준 45%로 압도적 1위이나 미·중 기술 디커플링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점유율은 대폭 하락할 소지
 - ※ 2위 한국 24%, 3위 일본 9% 등과 격차가 크며, 특히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47.5%에 달함
 - 미 상무부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³³⁾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2020.9.9.)
 - ※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면 상무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SMIC와 거래할 수 있음. 미국이 SMIC를 제재할 경우, 부품 대부분을 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SMIC에 각종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
 - 발표 전날 미국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40여 년 협력에서 ‘위대한 결별(Great Decoupling)’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
 - ※ Foreign Policy는 미·중 디커플링을 지난 수십 년간 진전된 세계화와 미·중 협력의 산물인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규정(20.5.14)
 - 미국의 중국 제재로 현재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³⁴⁾

31) 2020년 8월 17일 미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로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용해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해 9월15부터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함. 2020년 5월 미국이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에 대한 생산에만 제약을 가했다면, 이번 추가 제재는 D램·낸드플래시를 비롯한 사실상 모든 반도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됨

32) 이은영, “최근 화웨이 제재로 본 미·중 디커플링 동향”, KDB산업은행, Weekly KDB Report, 2020.6.29.

33) SMIC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으로 TSMC와의 거래가 차단되면서 대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이실리콘은 화웨이의 자회사로 글로벌 팹리스 기업 중 4위

34) 산업연구원, 미중 기술 분쟁의 화두, 반도체산업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20.7.31.

-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자급력이 상승할 것이며,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기술 독립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³⁵⁾

- 화웨이 사태 및 미·중 디커플링 전망

-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완화할 기미는 없으나, 화웨이 봉쇄의 핵심인 보안 우려가 해소되면서 5G 상용화를 준비 중인 국가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
-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면 미국이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저지 하는데 활용했던 핵심 근거를 잃고,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반도체 기업 대책으로는 중동지역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미국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일본·EU와의 협력과 성장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방법도 대안으로 포함 되어 있음
- 화웨이 제재와 응수는 미·중 기술 디커플링의 상징이면서 1단계 무역합의 이행 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의 제재에 동참 태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진영화의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화웨이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는 국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일부를 제외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화웨이 장비를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 또는 한시적 허용 등의 모습을 보임
- 이러한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과의 이해타산 및 화웨이 장비의 높은 경제성 등이 작용
- 최근 영국은 2027년까지 영국의 5G망에서 2027년까지 화웨이 장비 제거를 명령(보리스 존슨 총리, 2020.7.14.)하였으며, 프랑스는 2028년까지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

35)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20년 4월 '중국과의 무역 제한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리더십을 어떻게 종식시키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양국 간 긴장 고조로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했으며, 중국이 기술 독립에 성공하게 되면 미국 기업에 대한 타격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디지털데일리 kwonhy@ddaily.co.kr 참고)



2 마·중 충돌의 파장 : 세계질서 변화의 조짐

■ 세계경제 주도권 관련

● 국제 규범의 와해 위험

- 코로나19는 이전부터 있었던 마·중 갈등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비접촉사회, 백신과 치료제, 인권, 국가 안보 및 정보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대립과 경쟁을 확장하고 국제 규범을 와해시킴으로써 역사적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큼

· 중국은 미국이 규칙 기반의 질서를 말하면서 오히려 그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 예를 들어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설립해 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탈퇴해 버리는 행태를 지적

● 재정·화폐 시스템 주도권 경쟁

- 오랫동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발휘된 분야인 자본시장 시스템, 글로벌 가치사슬(GVC), 기축통화 등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로 인해 무력해진 통화정책과 정부 적자를 키우는 재정정책으로 인한 자본주의 작동시스템에 위험 요소

· 국채 발행 및 소유(매입·매각) 게임, 재정부실로 인한 국가 부도 위험 등으로 글로벌 통화가치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므로 기축통화 보유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

- 당분간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은 지속하겠지만, 코로나19로 기존의 국제질서가 급속히 무너지고 미국의 금융 패권이 약해진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음

·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와 채무국의 부도 등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세계 경제 지배력이 약화하고 이는 다시 달러 수요 감소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걱정 없는 달러 발행이 어렵게 됨

- 중국이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 디지털화폐 발행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에나 미국과 중국의 기축통화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위안화의 세력이 강해지면 미국과 중국은 통화 네트워크 경쟁을 벌일 수도 있음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안화의 현재 위상은 달러보다 현저히 미약 : 세계 경제에서 유로, 파운드, 엔화의 비중이 합쳐서 평균 30~35% 내외라고 볼 때, 위안화 국제화를 둘러싼 마·중 간 전략 경쟁은 위안화의 비중이 10~15%를 상회하기 시작할 때 참여하게 발생할 것임³⁶⁾. (달러 비중이 50% 미만으로 내려가 지금과 같은 패권적 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 ※ 남중국해 분쟁(도련선³⁷⁾ 항행권이 중요한 이유는 석유 운반 항로이기 때문이기도 함
- 재정·화폐 시스템 경쟁과 기축통화 경쟁은 향후 글로벌 플랫폼사업자(GAFA) 지배력 규제³⁸⁾,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시스템 도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안보와 경제가 혼합된 파워게임

- 마·중 갈등은 전통적인 정치·외교·안보 측면을 벗어나 경제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국가체제와 이념³⁹⁾, 가치, 문화, 국격, 이미지 등 모든 분야로 충돌이 확산하고 있음
 - 갈등 키워드 : 무역 분쟁, 화웨이 사태, 일대일로, 제조2025, 미 행정명령, 경제변영 네트워크(EPN),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홍콩사태, 항행의 자유(남중국해), 영토문제, 인종차별, 미국의 경쟁관계 선언, 코로나19 책임론, 새로운 경제안보전략(구상 중) 등
 - 대다수 영역에서 미국의 선제적 공세가 두드러지며, 중국이 점차 공세적인 태도로 전환 중
 - 중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2049년까지 ‘두 개의 100년’을 완성해서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시진핑의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
- 안미경중(安美經中)으로 국제관계 복잡화
 - 코로나19 발생 원인론을 둘러싼 마·중 간 갈등은 이전부터⁴⁰⁾ 진행 중이던 무역전쟁에서 환율전쟁, 채권전쟁으로 확대되고, 기술 패권 경쟁을 넘어 여론전, 심리전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⁴¹⁾
 - 마·중 갈등 심화는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와 탈-G2 현상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독자생존이나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가 혼합된 새로운 질서 형성을 의미

36) 동아시아연구원,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Special Report, 2020.8.

37) 도련선(島鏈線/island chain)은 중국이 태평양의 섬을 사슬처럼 이어 설정한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말함. 제1도련선은 「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를 연결하며, 반경을 더 넓힌 제2도련선은 「오가사와라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로 연결되는 방어망으로 미국의 태평양 지배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인식됨.

38) GAFA 독점 규제는 미국 기업의 해외 활동(조세회피 등을 야기하는 해외 법인 운영 등) 견제, 현지 화폐 결재로 인한 달러 지배력 약화 등과도 관련이 됨

39) 백악관 보고서(2020.5.20.)에서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CCP: the Chinese Communist Party)’을 분리하여 칭하고, 시진핑 주석을 ‘공산당 총서기’로 지칭하며,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움직이는 주체라는 것을 강조.

40) 2012년 중국의 총 교역액(당시 3조 8,670억 달러)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경제심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출범시키면서 마·중 경쟁 구도가 글로벌화됨

41) 이상현, “미국의 대중국 전략: ‘경쟁적 접근’ 합의와 파장”,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20.7.



-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 경제의 붕괴가 세계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
- 중국의 IT가 급부상하고 혁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굴기가 시작되면서 경제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직접적 견제가 본격화
- 2020년 코로나19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고, 상호 본격적인 경쟁 관계를 선언함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노선 선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인도, 일본,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상당수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미국은 동맹(안보는 미국)’,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경제는 중국)’라는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더 어렵고 직접적인 ‘선택 압박’에 노출
- 새로운 대립 구도 형성 : 대립의 진영화
 - 미국은 안보와 경제 분야 모두에서, 중국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다자주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양국은 앞으로 더 강하게 경제와 안보 문제를 결부시킬 것으로 예상
 - ※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사안으로서 경제 분야 목표가 미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자산 보호, 그리고 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⁴²⁾이며, 미국은 ‘경제국가안보전략(Economic National Security Strategy)’ 초안을 만들고 있음⁴³⁾
 - 미국은 새로운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을 추진하여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중국은 수요시장 지위와 제조 사슬을 활용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⁴⁴⁾을 주도적으로 추진
 - 2020년 11월 1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RCEP 협정에 서명(인도 제외)
 - 미국이 제안하는 EPN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시켰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비슷한 개념으로, 포괄적인 다자간 협정이 아니라 내용은 TPP와 비슷하면서도 국가 간 협정들을 종합하는 형태⁴⁵⁾

42)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멤버로 거론되는 나라는 한국,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이스라엘, 대만, 베트남 등

43) 이상현, “미국의 대중국 전략: ‘경쟁적 접근’ 함의와 파장”,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20.7. p.3

44) 관세장벽 철폐를 포함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지만, RCEP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원산지 규정 등도 포괄하는 협정임

45) KDI 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토론회자료(2020.6.9.), “코로나19와 미중갈등, 그리고 한반도”, pp.15~22.

- EPN은 미·중 디커플링을 통한 우방국과의 경제동맹 강화 전략으로 해석되며, EPN의 대상은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이스라엘, 대만, 베트남 등 거론
- EPN은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경제국가안보전략(Economic National Security Strategy) 중 하나이며, 그 3가지 핵심은 ① 미국의 경제 경쟁력 강화, 혹은 미국 경제의 급속충전(turbocharge), ② 미국 자산의 보호(safeguard America's assets), ③ 경제번영네트워크
- 안보와 경제 협력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협력체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가 최근에 군사 훈련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
- 2007년 결성된 4국 안보회의 성격이지만 최근에 중국 견제를 위해 외교장관 회의 등 활성화
-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권 보호 및 인권, 경제 개발, 안보 등 공동의 가치를 추구
- 최근에는 한국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도 보도된 바 있음
- 제3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이해관계가 있고 갈등 관계 속에 협력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일방적인 '편가르기'나 '줄서기'에 응할 수 없으므로 산업 분야나 기술 분야별로 새로운 블록이나 협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미·중 갈등 장기화의 위험

● 더 촘촘해지는 대립으로 인한 복원력 약화

-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취하고 있는 많은 조치는 초법적 성격(행정 명령)을 띠고 있으며, 점차 법률화 및 제도화되고 있음⁴⁶⁾
- 새로 제정된 「수출통제개혁법(ECRA)」은 민군(民軍)겸용 기술이 수출규제에 적용됨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14개 신흥기술 및 기초기반 기술도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음
- 5G,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로봇, 항공 우주, 바이오 등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들은 본질적으로 민군겸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상기 14개 카테고리 포함된다는 점에서 미·중간 기술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46) 연원호·나수엽·박민숙·김영선,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6.24. p.20.



- 2019년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대장정”⁴⁷⁾ 발언에 비추어볼 때,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 및 기술패권 경쟁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금의 눈앞의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시진핑은 주석직 연임제 제한 폐지(2018)를 계기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어 계속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마·중 간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며, 충돌 사안도 다양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 보조금 : 미국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보조금 철폐를 요구하지만, 보조금은 중국 공산당의 권력의 원천이고 중국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므로 중국이 들어줄 수 없을 것임
-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된 것을 실감하고 더 세밀하게 중국을 압박
 -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총영사관을 폐쇄하였으며, 화웨이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중국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rogram)에 참여한 사실을 숨긴 교수를 체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
- 중국이 막대한 수요시장 및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다른 나라와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질서를 지배해 온 미국의 선진 우방국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첨예한 대립이 누그러질 여지는 있음
- 글로벌 공급망 디커플링의 파장
 - 마·중 무역분쟁이 지속된 지난 2년간 양국 교역규모는 감소했지만 이를 주변국(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캐나다)에서 흡수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이 기존의 거래를 단절했다기보다는 언제든지 복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코로나19로 촉발된 생필품이나 전략물자에 대한 상대국 의존을 줄이는 리쇼어링은 마·중 양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양국이 완전히 분리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됨⁴⁸⁾
 -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마·중 갈등의 지속은 GVC 붕괴의 피해를 다른 나라들이 입을 수 있음
 - 마·중 갈등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 경쟁이 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탈중국 참여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있음⁴⁹⁾

47) Foreign Policy(2020. 5. 22), “China has Two Paths to Global Domination,” <https://foreignpolicy.com/2020/05/22/china-superpower-two-paths-global-domination-cold-war/>.

48) 배영자(건국대), 미중 기술 패권경쟁(미국 관점)과 한국의 전략, 국회 세미나, 2020.7.28.

49) 이태규, “탈세계화와 한국경제”, KERI,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 2020.7.15.

-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통해 GVC 재구축이 가능하고, 지역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 형성도 가능
- 지금까지는 GVC가 주로 산업생산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혁신시스템과 인적 자원 분야까지도 확대될 수 있음
- 즉,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디커플링이 4차 산업혁명과 첨단기술 부문에서도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학문적 교류 활동과 유학생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음
- 극단적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가치사슬이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된다면, 인터넷이나 OS 등 많은 서비스플랫폼도 양분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2개의 세계가 가동되는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전망⁵⁰⁾

- The Economist는 분석 기사를 통해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외교적 방안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해결에 나설 것이며, 안보 및 인권 이슈 등에 대해서도 중국과 대립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주요 견제 대상이 될 것이나, 무역적자 외에도 지재권, 시장 불균형, 국고 보조금 등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할 것임
- 바이든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美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적자 이슈 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대 중국 수출 증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어려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인 방안을 통해 경제 이슈를 넘어 안보, 인권 등의 이슈를 지속 제기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호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이슈를 해결할 것임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안보 분쟁에도 개입할 것으로 전망
 - 대만 및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 UN 및 NATO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국과 분쟁 관계에 있는 일본, 호주, 인도와 협력하여 대응할 방침
 -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도 남중국해 및 대만 주변에서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훈련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미·중 양국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50)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워싱턴 통상정보, 2020.8.20.



- 바이든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료 용품 및 주요 장비의 미국 내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함
- 아울러 미국 내 제조 생산을 늘리기 위해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대신 미국 내 생산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조업을 장려할 것임
- 바이든은 대선공약에서 중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 7,000억 달러의 R&D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다만, 미국 내 대체품을 찾기 어려운 중국산 기초 제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여 미국 기업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

3 G2의 파트너로서 유럽과 아시아

■ 유럽의 위기

- 유럽식 자본주의 특성과 위기의식(Consciousness of crisis)
 - 유럽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적 의식이 있으며, 정치·경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으로 결속되어 있음
 - 상당수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가 모호한 시스템 운영
 -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혼합하여 고율의 조세로 고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체제라고도 불림
 -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적인 저성장과 고령화, 실업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여기에 일부 국가의 과도한 부채, 브렉시트, 이민자 문제, 코로나19 대응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음
 - 최근에는 “이민자들이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뺏는다”는 포퓰리즘을 내건 극우 정당이 약진
 -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의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에 관심이 높아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공권력을 강화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상대적으로 반감이 큼
- 극우 민족주의의 확산
 - 반(反) EU 정서에 기반을 둔 극우 민족주의 정치 세력이 확산하면서 ‘하나의 유럽’이라는 EU 설립 정신을 위협하고 있음

- 2019년 5월 유럽의회⁵¹⁾ 선거 결과 브렉시트, 마·중, 마·EU 무역 갈등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EU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극우 정당들의 우세가 두드러짐
- ※ 극우 정당 유럽자유민주그룹(EFDD)과 유럽민족자유당(ENF)이 112석을 확보, 이전 대비 34석 증가(브렉시트로 751석이 705석으로 줄어들)
- ※ 반면, 유럽의회 내 균형자 역할을 하는 양대 정파인 중도우파 '국민당그룹(EPP)'과 중도좌파 '사회당그룹(S&D)'의 의석수는 332석으로 줄어들어 유럽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확보 실패
- 유럽의회에서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돌풍을 일으키면 유럽이 기존에 추구했던 세계화, 자유무역, 환경보호, 난민 정책 등 노선 수정이 불가피함
- 중도 세력이 포퓰리즘 정당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럽 통합을 이끌 리더십이 없는 것도 문제

● 브렉시트와 유럽 내 리더십 약화

- 2020년 1월 29일, 유럽의회가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비준하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단행
 - 영국은 EU 의회·집행위원회·유럽이사회 등 EU의 3대 의사결정기구에서 탈퇴
 - 영국의 EU 탈퇴는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7년 만임
-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7개월 만에 브렉시트가 실현됐지만, 영국과 EU 간 FTA 체결 시한이 연말까지로 촉박해 영국이 경제 부문에서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있음
 - 안보·이민·교통 등 정치·외교 부문에서는 무난한 협상 타결을 전망하지만 통상 문제가 걸린 FTA 체결은 난관 예상
- 영국이 탈퇴한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화해 56주년을 맞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아헨 협정'에 서명(2019.1.)
 - 양국 정상은 포퓰리즘과 국가주의 확산에 맞서겠다고 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브렉시트 이후 권한 강화를 노리는 것으로 평가
 -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될지에 대한 의문과 변수가 많음

51) 유럽의회는 법안 심의·의결권, 주요 정책 협의권, 주요 협정 체결 동의권 등 통상적인 국가의 의회와 같은 입법권을 가지며, EU 기관에 대한 감독·통제권과 예산에 관한 결정 권한 등을 행사



- 코로나19로 인한 쉥겐(Schengen agreement⁵²) 조약의 무력화와 재정 악화
 -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자국 이익에 우선하고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독일 등 북유럽 국가와 만성적인 국가 부채로 부도 위기에 시달리는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 간 갈등 표면화
- 잠재적 위기 요인 : 국가별 이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 독일은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지만, 프랑스는 실업률이 높고 물가상승이 발생하더라도 경기 활성화 의지가 강한 반면에 독일은 긴축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경제적 갈등 요소 내재
 -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는 독일과 프랑스 간에 경제적 긴장이 높아지고, 프랑스는 점점 더 아프리카와 지중해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며, 독일은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임⁵³)
 -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은 주변국의 긴장을 키움
 - 실제로 독일은 러시아와 긴밀한 에너지(송유관/가스) 협력을 하고는 있으나, 러시아가 교역 상대로서 비중 있는 존재가 아니며 정치·군사적으로 언제든지 대립할 수도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고 함
 - 독일은 수출주도 경제라는 점에서 EU가 쇠퇴하지 않도록 힘을 쓰는 한편, 독일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의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갈등 요소도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길어질수록 EU 내 협력체제와 국제 관계가 와해되고, 최악의 경우 유럽식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음
-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에 부딪힌 EU가 경제·사회적 피해를 입은 회원국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2020.8.)
 - EU 27개 회원국은 처음으로 EU 공동 채권을 발행해 7,500억 유로(1,032조 8,175억 원) 규모의 EU 경제회복기금(Recovery Fund)을 마련, 이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포함된 경기 부양책에 합의
 - ※ 7,500억유로 중 3,900억유로는 보조금으로, 3,600억유로는 대출 형태로 지원 : 당초 기금 규모, 보조금 대출 비중, 기금 지원방식 등 기금의 주요 사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협상이 순조롭지 못했으나 기금 조달 방식, 경제구조개혁, 법치 존중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

52)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으로, 쉥겐조약 가입국은 같은 출입국 관리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간 제약 없이 이동 가능. 현재 쉥겐조약에는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노르웨이·아일랜드·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등 총 26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불가리아·루마니아·키프로스·크로아티아는 미가입

53) George Freidman(2020),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Flash points)」, 김앤김북스, pp.269~270.

- ※ 회원국의 경제회복 지원,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위기 대비 등 3가지 주요 용도를 정하고 용도별로 구체적인 지원, 투자계획,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정함
- 유럽의회 동의와 회원국 비준 절차 남아 있지만, EU가 국가 협력체를 넘어 재정 부담까지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로 진전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유럽 합중국’으로 발전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음
 - ※ EU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재정연합(Fiscal Union)을 위해서는 EU 기능조약 개정, 유로본드 발행, EU 중앙집권적인 거버넌스 권한 부여,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 등 선결 필요
- 경제회복기금도 결국 장래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므로 효율적인 기금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
 - EU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정준칙(재정적자 GDP 대비 3%, 국가채무 GDP 대비 60% 초과 금지) 적용을 유보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GDP 대비 국가채무 2019년 79.4% → 2020년 95.1%)⁵⁴⁾
- 디지털정책 강화 등
 - 세입 확충 방안 중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배출권거래제 확대 등은 역외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⁵⁵⁾
 - EU 집행위는 2020년 3분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선별된 분야에 ‘탄소국경세’ 도입 법률안을 제안할 계획
 - OECD 차원에서 2020년 말까지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인 디지털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EU는 2021년 상반기에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할 예정
 - ※ EU 집행위는 2018년 3월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에 3%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다국적 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는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
 - 디지털세 논의와는 별개로 디지털 기업에 대한 독점규제 강화 추진
 - 현재 EU는 미국 정보기술(IT) 4대 업체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럽의회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
 - ※ 2020년 8월, 미국에서 열린 GAFA CEO 청문회를 계기로 디지털 독점 규제 논의 본격화

54) 조규산(2020), 작성자료,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재경관

55) 한국개발연구원(KDI), 월간 나라경제, 2020.08.24. 참고



■ 매력적인 협력대상으로서의 아시아

- 마·중 충돌 완충지대로서 다자주의 협력의 중심
 - 마·중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GVC 와해와 새로운 질서 형성에 각국과 글로벌 기업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리쇼어링보다는 니어쇼어링 (nearshoring: 본국 회귀보다는 중국 주변 국가 및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로 이전과 우회) 현상이 나타남
- 미국과 중국 중심의 경제·안보 분야 다자간 협의체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
 - EPN과 RCEP은 성격이 다른 협력체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고⁵⁶⁾, RCEP에서 비중 있는 국가들이 EPN 참여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며, 현실적으로 마·중 디커플링이 어렵게 되면 새로운 다자간 협력체 등장 가능
 - 미국은 EPN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게 탈중국화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으로의 회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인력과 생산시설을 미국에 우호적인 EPN 참여 국가들로 이전하도록 유도
 - 서방 기업들은 중국의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소비시장의 규모도 크므로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탈 중국 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은 세계경제에도 큰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신 냉전의 중심지,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 군사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의 연결
 - 신 냉전시대에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인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해도 국가안보는 경제 분야와 함께 우방국을 묶고 세력화하는 강력한 근거이며 변함없이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분야임
 - 오늘날 첨단무기 경쟁과 사이버 보안기술은 패권 경쟁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군사기술 R&D에 막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음
 - 미국의 동맹으로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추진, 북한의 핵 위협,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의 갈등 및 미국의 개입,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 중국과 인도의 충돌, 홍콩사태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굵직한 갈등이 상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유럽이나 러시아 등 역외 제3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음

56) ASEAN 회원국이 2011년에 처음 제안했지만, 중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에 대항하기 위해 적극 협력

-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인 마·중 진영 재편과 이해 게임이 아시아에서 벌어질 수 있으며, 군사와 경제 문제를 결부시킨 다양한 협상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질서를 위한 상징적 사건이 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음
- 각국이 중국과 경제적 고리를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미국이 선택을 강요할 경우에는 ‘이데올로기=군사=경제 협력’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음
- 동북아시아·동아시아에서 협력 파트너 상실 또는 경제적 고립은 패권 경쟁에서의 실패를 의미하므로 다양한 조합과 유형의 대(對)미국, 대 중국 협력관계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
- 안보와 인권이 직결되는 아시아
 -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중 충돌은 경제와 군사를 넘어 가치와 체제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권과 체제 우위에 대한 논쟁이 심화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실체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계승한 ‘중국 공산당’으로 규정
 - 재선에 성공한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완 해협 현상을 훼손하는 일국양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밝히고(2020.1), 미국과의 공조를 공고히 함
 - 홍콩 보안법 사태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높아졌음
 - 가치와 체제 영역에서 나타난 갈등은 기존 경쟁 구도를 ‘미국 vs. 중국’에서 ‘자유 진영 국가들 vs. 중국’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큼
 - 이러한 경쟁 구조의 변화는 미국으로서는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티베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자유진영 국가들의 결집을 강화할 수 있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 그러나 중국은 국내정치적으로 공산당의 정통성이 걸려있는 ‘주권’과 ‘통일’이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현안임⁵⁷⁾
- 코로나19를 계기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위상 상승
 -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의 방역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57) 김한권, “COVID-19 발생 이후 중국 외교정책의 현안과 미중관계의 함의”,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24, pp.38~39.



- 사망률도 낮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회복 및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나라마다 코로나19의 확산 유형이 다르고, 2차 유행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감염현황 발표에도 의구심은 있지만, 2020년 9월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대만, 한국, 중국 등의 방역 성과가 좋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사망률이 낮게 나타남
- 미국과 유럽의 초기 방역 실패는 경제와 문화 소비 중심지로서 위상을 흔들고 전통적인 강국으로서 규범과 질서의 리더십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에너지, 의료·방역, 핵심 산업 부품 등 전략 산업의 자원 확보 및 필수 제품의 국내 생산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면서 국제적인 신뢰 상실
- 경제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위기는 ‘아시아의 세기(Asia Century)’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아시아는 2040년 전 세계 소비의 40%와 GDP의 5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⁵⁸⁾
- 아직까지는 코로나19를 잘 진정시키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다자간 방역협력 및 재확산 방지 등 다국적 대응체제 구축에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전염병에 대한 다자간 방역 협력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긍정적 협력 의제가 될 수 있음

4 커지는 코로나19의 영향력

■ G2 경쟁과 코로나19

● 코로나19 책임 공방의 지속

- 미국이 코로나19 피해와 연결지어 일방적인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제재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고통을 악화시키므로 쉽지는 않을 듯
-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구를 빌미로 ‘코로나 관세’,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산에 대한 이자지급 유예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중국의 주권면제 (sovereign immunity) 박탈에 대한 논의도 있음⁵⁹⁾
-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미·중 관계로 미국의 화웨이 규제는 중국 기업에 대한

58) McKinsey&Company(2020), “Could the next normal emerge from Asia?”

59) Reuters(2020.5.1), “Trump threatens new tariffs on China in retaliation for coronavirus.”

수입규제 및 미국 기술 사용 제품의 대 중국 수출규제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를 상대적인 도약 기회로 삼는 중국의 디지털화 추진 및 디지털 경제 육성
 - 중국은 미국의 다양한 압박을 견뎌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코로나19를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디지털화 및 디지털 경제 육성을 가속하고 있음⁶⁰⁾
 - KOTRA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는 비대면·무인 서비스가 일상화하고 해당 플랫폼 수요가 늘어나며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방역과 조업 재개를 계기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등 디지털 경제 육성을 전면 추진하고 있음
 - 빅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등 IT를 활용한 바이러스 방역 및 조업 재개 지원, 전자상거래·온라인 교육 등 인터넷 기반 비대면 재택경제 등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
 - 정부와 기업 모두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 : 중국 정부는 5G⁶¹⁾,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인터넷 등 분야를 ‘신형 인프라(신SOC)’로 지정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
 -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등 모든 산업 ‘생산’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업으로 디지털 산업 생태계 구축 : 도·소매, 요식·숙박, 물류, 교육, 문화 등 서비스 분야에서 ICT와 융합형 비즈니스가 확산하고, 제조 분야도 산업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로봇, 스마트 그리드, 자율주행 기술 도입 확산
 - 소비의 디지털화로는 온라인 소비 플랫폼 다양화, 온·오프라인을 접목한 O2O 소비 확대, 디지털 소비 쿠폰 등을 들 수 있음
 -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미국의 압박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의 국력과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가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판단됨

■ 자국 우선주의 팽배 현상 : 높아지는 디지털 기술 장벽

- 글로벌 규칙의 신뢰 상실 : 분쟁 특성 및 힘의 발휘 방식 변화

60) KOTRA(2020.8),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대응방안」

61) 2020년 말까지 5G 기지국 60만 개소 이상을 구축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400여 개의 5G 혁신응용 프로젝트와 600개 이상의 ‘5G 플러스 산업인터넷’ 프로젝트 진행 중



- ICT산업에서 GVC의 고착화, 자본시장 개방, 금융시스템의 글로벌화 등으로 자국 산업 보호라는 의미가 퇴색되던 중,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는 자국의 이익이 무엇인지(또한 기업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기존의 질서에 의문을 품게 함
- 미국과 중국 정부는 국가 패권 경쟁에서 상대를 이기는 무기로 기술을 쓸 수만 있다면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 후생을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
 - 자국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쟁기업의 가치사슬을 공격하여 4차 산업의 선도적 지위 확보 추구
 - 미국은 과학기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불공정행위는 물론, 중국의 인재양성 전략에도 민감하게 반응
- 기술우위를 가진 국가는 무역 분쟁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큼
 - 세계는 GVC로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인은 첨단 ICT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국의 산업적 이익을 위한 기술 제재는 이러한 전체 연결고리를 와해시킬 위험이 존재
 - 미국의 화웨이 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반도체 시장의 충격과 GVC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우위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 ※ 반도체 칩 설계 등 자국의 핵심기술 사용 금지가 치명적인 장벽으로 작용
-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생산방식이 바뀌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공격해서 이득을 보려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전쟁이 발생하고 있음⁶²⁾
- 탈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장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ICT 발달로 기업의 위치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비자들을 놓고 경쟁하고, 과거에는 넘을 수 없었던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한다면, 탈세계화는 시장과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경계가 생기는 것을 의미
 - ※ “세계화도 장벽을 부추길 수 있는데, 특히 돈이 고갈되었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가 그러했다. 인지된 추가적 위험들 -테러, 폭력적 분쟁, 난민과 이민, 빈부격차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집단에 더 단단히 매달리게 된다.”(팀 마셜, 「장벽의 시대」에서)⁶³⁾

62) 조경엽, “한·일 무역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KERI Brief 2019-09.

63) Tim Marshall(2020), 「장벽의 시대」, 이병철 옮김, 바다출판사, p.13.

-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인 영역의 분리를 디지털(사이버) 영역에서 보완해주지 못하면 정신적인 영역으로 장벽이 확장될 가능성이 큼
- 역사적으로 물리적인 분리는 정신적인 분리를 가져왔으며, 그 대상은 종교, 이념, 정체성과 소속감 등 인간의 특성을 구성하는 정신적인 요소임. 따라서 인간이 인지하는 자신이 처한 차별적이고 특수한 물리적인 여건은 새로운 분열을 배태할 수 있는데, 디지털 장벽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

■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 자유와 통제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에 대한 논의 대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에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및 경제 논리에 인간 생명 중시라는 가치가 추가되고, 여기에 강화된 정부 역할과 관련된 갈등을 키워드로 추가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는 외형적인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이 한 국가의 지배력을 좌우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국내 갈등 해소와 일원적인 통치력 확보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며, 국가 간의 질서(국제질서)에 여러 주체가 가세한 질서(세계질서)가 난관으로 등장
 -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사이버보안,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새로운 질서 형성의 중요한 요소
 - 생존과 1차원적 욕구 충족 등 개인과 기업이 갈구하는 ‘자유’와 국가의 ‘통제’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임
- 코로나19와 관련된 ICT 정책이 다수 등장
 - 언택트 사회 시스템 작동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정책, 코로나19 예방 및 퇴치와 관련된 정책, 기타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협력과 인공지능의 활용, 컴퓨팅 자원의 활용, 감염 확산 방지를 데이터와 GIS 및 앱 활용, 그리고 상위 정책 부문에서는 기존 정책 수정 재정립과 AI-데이터 관련 정책과 R&D 투자 강화 등
 - 국가 내 정부 부문과 민간 부분의 협력이 증가
 - 5G, AI, 슈퍼컴퓨터 등을 둘러싼 경쟁은 치열하지만, 지구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

-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데이터 시각화(GIS 기반 지도 등) 및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 원격의료 및 의약품 정보제공 등 공익서비스 외에 ICT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
- 코로나19로 재정적자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정상적으로는(normally) 꺼리던 정책을 사용⁶⁴⁾
 -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회사채시장 및 대출시장 등 신용시장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EU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던 독일이 프랑스와 함께 EU 차원의 코로나 대응 기금 조성을 제안
 - 과거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정책수혜 대상의 자구노력은 요구는 불가능하고 피해 가계와 기업 지원이 우선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병행 사용 : 기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자산 매입 확대, 유동성 공급)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세수(稅收) 확보대책 없는 추경예산 편성 등

64) 박성욱, “주요국의 코로나 위기 대응 경제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2020.7.3.~7.7.(제29권4호)

IV 디지털 리더십과 역할 : 전환을 위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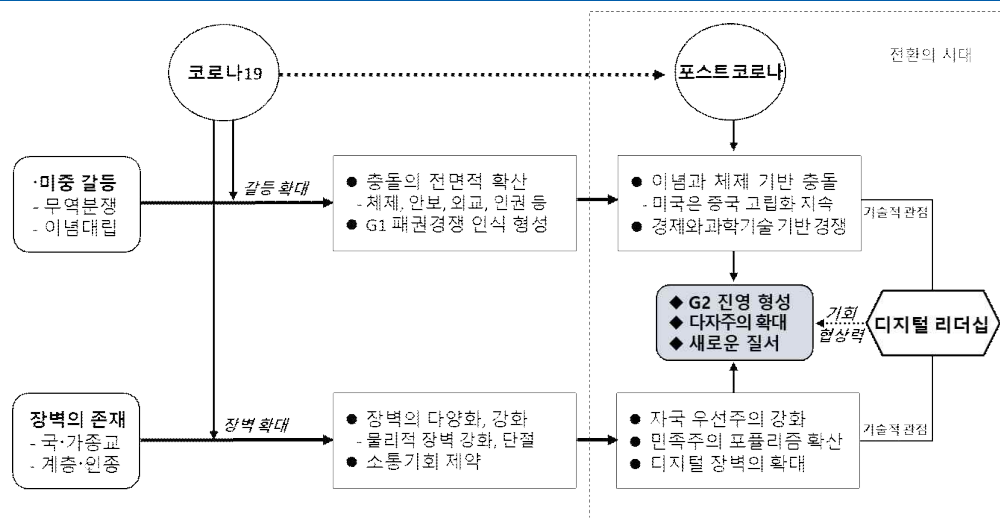
역사에서 분쟁은 종식되지 않는다. 공통의 큰 시련이 왔을 때 처음에는 싸움을 멈추고 협력하지만,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다툼은 바로 자기 자신 앞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로 다가오게 된다. 코로나19와 국제사회 갈등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기도 했고 불신이 커지기도 했다. 이제 모든 나라의 상황은 심각한 쪽으로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상황이 나은 국가, 통찰력 있는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유리하다. 갈등과 분쟁 너머 다음 세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에 희망을 걸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개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 극복 보다는 미래를 지향한 질적인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

1 디지털 리더십의 중요성

■ 개념 정의

- 역사적으로 인류는 전환기를 맞이할 때마다 인간이 적응해야 할 ‘새로운 틀’을 만들어 왔음
 - 예를 들면,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과 같은 설명 도구, 국가의 형태와 정부의 존재, 법제도 등이 있으며, 지금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도 삶의 양식(樣式) 전환을 논하는 새로운 틀임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방법으로 논의되는 디지털 전환은 그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삶과 존재의 가치 변화로 귀결될 것이며, 그 변화를 주도하는 요체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ICT, 바이오 등 대부분 인간의 본질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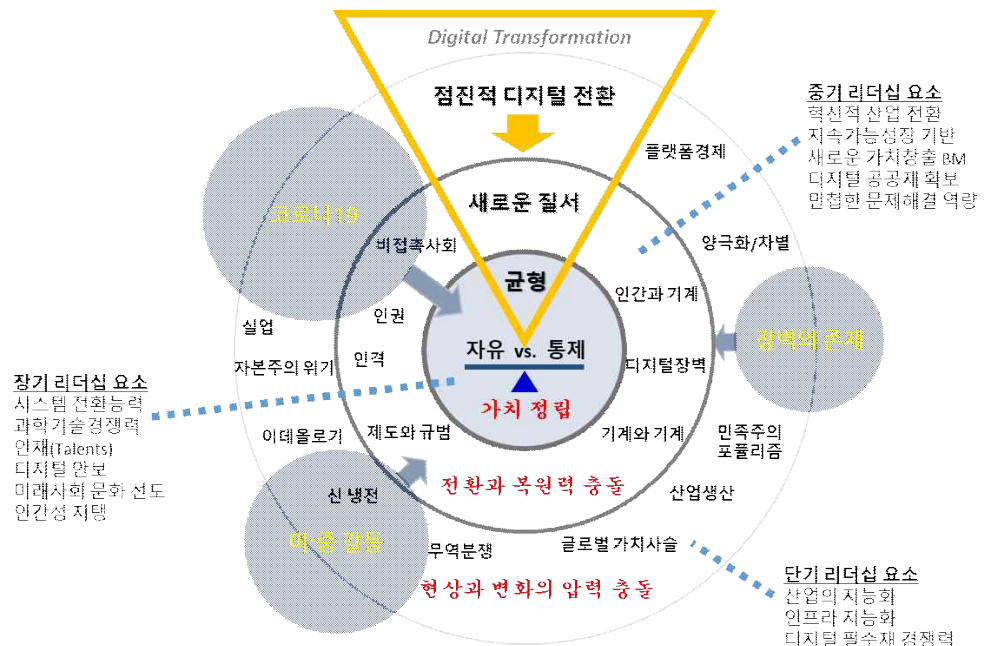
그림 3 코로나19가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리더십의 중요성





- 디지털 리더십은 자유와 통제 간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게 하는 기술혁신 -특히 디지털 전환을 가져오는 혁신 - 의 체화과정에서 국가·사회를 안정화하고(전환 능력) 인간성을 유지하는 역량(회복·복원력)으로 정의 가능
- 코로나19, 미·중 충돌, 글로벌 장벽 등이 디지털 혁신과 맞물려 전환과 복원 사이에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할 것으로 예상(그림 4 참조)

그림 4 세계질서 변화와 디지털 전환 단계를 고려한 디지털 리더십 요소



■ 디지털 리더십의 구성요소와 국가의 역할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팬데믹과 함께 비접촉사회, 자본주의 위기, 인권 등 여러 부분에서 기술혁신과 인간성 지탱이라는 상충적 과제를 동시에 던져 주고 있으며, 세계는 유지와 전환 사이에서 여러 충돌 과정을 거쳐 ‘자유와 통제’ 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게 됨
- 단기적으로는 균형을 깨는 변화의 압박이 커지고 점차 ‘전환과 복원’ 간 충돌이 커질 것이며, 혁신 지향적인 국가는 복원 의지보다 전환 의지가 클 것으로 판단됨

- 국가(정부)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계기가 필요하므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힘보다 위기를 새로운 전기(轉期)로 활용하려는 힘이 우세
 - 개인 및 사회적으로 문화적 전통, 인간의 자유 등 인간성과 관련한 복원 의지는 강할 수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과거의 열세나 새로운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는 전환 욕구로 연결됨
 - 국제사회에서 기득권이 큰 국가는 기존의 질서로 경쟁국을 계속 제압하려 하고, 열위에 있던 국가는 전세 역전을 시도
- 인간성 복원 및 디지털 전환 역기능 해소 등 인도주의적 문제는 협력 차원으로 접근 가능
- 현재의 3가지 세계질서 변화의 힘과 디지털 전환과정을 고려하여 3단계 시간 축으로 나누어볼 때, 단·중·장기 모두 현상 유지나 회복보다는 ‘전환역량’이 중요하며, 국가(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기술혁신 역량만이 아니라, 하부구조와 국가·사회 시스템 전환, 인간사회 제도 등 모든 분야의 질적인 변화를 고려한 전환역량을 확보해야 함
 - 단기·중기·장기를 관통하는 국가적인 디지털 리더십으로는 데이터 주권 확립, 과학 기술 경쟁력 배양, 디지털 핵심(king pin) 산업 확보, 글로벌 디지털전환 협력 주도, 글로벌 디지털 공공재 이슈 선점, 국제기구 및 협력체 활용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고자 함
- 코로나19가 미·중 충돌과 글로벌 장벽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 방향을 고려할 때, 우리가 앞서 정의하고 추구하는 디지털 리더십은 질서 재편 과정에서 글로벌 협상력과 미래 사회 주도력의 원천이 될 것임

2 디지털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새로운 가치와 규범에 대한 궁금증 증가
 - 코로나19가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변화를 일으키고, 비대면·비접촉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상황에서 점차 기존과 다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실감
 - 코로나19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욕구 등을 부각하여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으며, 개인의 생존권과 자유를 그 어느 때보다 중시하게 만들고 있음

- 인간의 곁에 최소한의 의식주만 있으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로 생존 가능하며, 심지어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의식주까지 해결하고 기본적인 욕구와 정서를 충족할 수 있는 것도 가능
- 제레드 다이아몬드⁶⁵⁾는 지난 수 천 년 동안 무기, 병균, 금속이 민족의 상이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이 그 차이를 만들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은 더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하고, 전파력과 공유로 개인의 취향을 충족
- 인류의 불평등을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적 차이라고 했지만, 디지털 기술은 정신적·심리적 요인에 다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인간이 처한 물리적 환경보다도 영향력이 클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지불식간에 인간의 존재 양식과 생각도 변화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하고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개인과 사회의 안전이 중요해지면서 점차 ‘안보와 경제’라는 이원적 프레임이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
- 탈세계화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한계가 있을 것이며, 국가 간의 안보와 경제가 혼합되고 국가와 기업의 이해가 상충하는 등 지금까지의 틀을 벗어난 현상이 발생하면서 사회와 개인을 위한 정부 역할 변화가 요구됨

■ ‘세금을 집행하는 정부’ 그 이상의 역할 요구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 역할과 새로운 전략 모색
- 코로나19로 인하여 ‘강한 정부론’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그 직전까지 많은 경제학자와 혁신이론가들이 ‘작은 정부론’에 힘을 실었고⁶⁶⁾ 과도한 정부부채를 우려하였으며, 기업처럼 움직이는 민첩한 정부를 주장하기도 함⁶⁷⁾
- 국가(정부) 중심의 통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본 고에서는 이러한 사회를 볼모 사회와 볼모경제(Hostage Society & Hostage Economy)⁶⁸⁾라고 명명하고자 함

65) Jared Diamond(2005), 「총, 균, 쇠 - Guns, Germs, and Steel: The Fates of Human Societies」 김진준 역, 문학사상사

66) Anatole Kaletsky(2010), 자본주의 4.0(Capitalism 4.0), 위선주 역, 컬처앤스토리(서울) 참고

67) Klaus Schwab(2016),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새로운현재(서울)

- 자유를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인간에게는 안전을 위한 통제는 자신의 자유가 볼모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윤 추구가 절실한 기업에게는 안전을 위한 활동 제한도 마찬가지로 인식
- 상대국(경쟁국)에 진출하여 정착에 성공한 기업과 개인이 국가의 볼모가 될 수 있으며, 상대국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bottle-neck) 기술도 보유국에는 유리한 볼모가 될 수 있음
 - ※ 예를 들면, 중국이 인터넷 검열을 위해 시스코의 라우터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디지털 기술에는 적대국이라 하더라도 쉽게 단절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무수히 존재
 - ※ Black elephants⁶⁹⁾ 특성이 있으며, 서로 약점을 교환하거나 적용 제외를 인정해주는 특성 내재
-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볼모로서 기술의 역할은 긍정적이며, 국가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 가능하므로 ‘단순한 볼모 이상의 역할’ 기대 가능 : ICT 핵심기술을 안보와 경제 협력에 통용되는 위상 확보 수단으로 활용

■ 전환기에 더욱 절실한 ‘국민을 위한’ 정부 리더십

- 인류 역사에서 전환기마다 궁극적으로는 ‘자유와 통제’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생성되고, 국가와 법제도 등 인간이 만든 어떠한 새로운 힘으로 그 균형을 찾게 됨
-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 물리적 장벽 및 디지털 장벽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와 정부와 사회에 대하여 ‘그들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함
 - 코로나19 발생과 대응에 관하여 미국과 중국은 인권과 체제 우위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냉전시대의 이념 논쟁이 재점화되고, 이러한 논쟁은 자유와 재산권 등 제도 시비로 확장됨
 -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이동 및 경제활동 제한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거부 시위 발생
- 코로나19 위기와 자본주의의 폐해(불평등, 실업 등)를 디지털 기술로 해소할 수 있다는 신념과 함께 주권국가로서 미래 사회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에 희망적인 좌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국가행정 시스템 개혁도 검토

68) 국경 없는 글로벌 플랫폼기업의 증가, 자본시장 개방의 진전, 코로나19 등이 맞물려 국가의 이해에 맞는 선명한 정책 구사가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을 저자가 개념화한 것임

69)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기지만 서로 말하기를 꺼리는 사안



3 디지털 리더십의 역할과 지향점

(1) 디지털 기술 주권 확립

- 마·중 분쟁과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 개인정보보호 등 국제 교역이나 기업 행위 관련 규제 측면의 접근에서 벗어나 데이터-인공지능 투입-산출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의 완성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다자무역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이 수립하는 정책과 지나치게 상충하는 정책을 피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 주권을 확립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 3법 개정(2020.8. 발효) 및 신기술 제품·서비스 확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보호와 활성화’ 양면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데이터·인공지능 서비스 관련한 사회적 갈등은 현재 진행형
- 각국의 데이터 관련 법은 데이터 활용 촉진과 데이터 주권 보호 양면성이 있으며, 국제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나라의 데이터보호 규제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사이버 사이버보안법 제정(2017년)
 - 중국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는 법률이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포괄적 법안
 - 외국 기업이 중국의 중요 정보구조와 관련되어 있다면 모든 정보를 중국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는 불명확하며, 중국 정부는 이 정보에 접근 가능하며 정보국의 검사 없이 중국 외부로 내보낼 수 없음
 - 백악관이 미국의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1차년도 연례 보고서」 발표(’20.2)
 - 신뢰 가능한 AI 기술개발, 테스트, 배치·채택을 위한 최초의 AI 규제 문서를 발표
 - EU, AI 백서와 데이터전략 보고서 발표(’20.2.19.)
 - AI 위험성과 악용을 막기 위해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등 강한 규제 적용 예상
 - ‘경계를 넘는’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제안으로 시장 실패 등 특수한 상황에서 역내·외 기업의 데이터 개방 강제가 가능
 - 거대 기업, 플랫폼 기업 등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조

- 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이 강해지면서 관련 기술이 무역 협상의 한 부분이거나 스몰딜(small deal)을 위한 교환카드가 아닌 강력한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 금지 처분도 쉽지만, 국민 편익과 관련 산업 발전 희생이 따름

표 1 주요국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정책 동향	
국가	주요 법(안) 및 정책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미래법안(H.R.4625,S.2217)(‘17.12.12.) : 경제 부흥과 사회의 안전성 도모 목적 - 인공지능직업법(H.R.4829)(‘18.01.18.) : 인공지능 노동력 향상, 근로자 교육 및 재교육 등 -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전략인 '미국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19.2.11) • 연방정부가 AI 선진화 5대 축 추진 : (1) AI 연구개발(R&D) 투자, (2) AI 자원 투입, (3) AI 혁신 장벽 제거, (4) AI 인재 양성, (5) 미국의 AI 혁신과 책임 있는 이용을 지원하는 국제 환경 촉진 등 - 미 상무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 거래제한 기업리스트 발표(‘19.4) : 정보보안 취약성이 직접적 이유 - 백악관이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1차년도 연례 보고서) 발표(‘20.2) • 미국이 처음으로 AI 기술표준 참여전략을 발표 • 비(非)방위 부문 AI R&D 지출서 발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AI R&D 투자를 요구 •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 테스트, 배치 및 채택을 위한 미국 최초의 AI 규제 문서를 발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제조 2025 발표(‘15.5) • ICT 기반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친환경을 지향하고 AI 융합을 통해 생산성 제고 - 인터넷 플러스(‘15.7) 및 인터넷 플러스 AI 3개년 기본계획 •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계획 제시 : AI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 육성 등 - 차세대 발전규획(‘17.7) • AI를 국가와 사회 전반의 변혁 기회로 삼아 중국의 미래를 선도할 국가 전략 제시 • 혁신 시스템 구축, 스마트 경제 확립,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6대 과제 포함 - AI 산업 3개년(2018~2020) 발전 촉진계획 발표(‘17,12) • 4개 핵심목표 설정 : AI 적용 및 응용범위 확대, AI 핵심기술 향상, 스마트 제조 발전 등 - 데이터 국외 이전 금지법안 시행(‘19.1)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관련 계획(‘18.4.25) • AI 개발 자원 마련 및 투자 촉진, 노동시장 변화 지원, 인재 양성, 윤리체계 및 법체계 마련 등 -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9.5월 발효) •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하여 법적인 설명 의무를 부과한 최초의 입법적 시도로서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과 포털의 의무 등 이슈 부각(이선구, 2019: 7) - AI 백서와 데이터전략 보고서 발표(‘20.2.19.) • 백서는 고위험 AI 선별과 6가지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강력한 방어막 형성 겨냥 • 고위험 AI에 대하여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등 강한 규제 적용 예상 • 데이터 전략의 핵심은 '경계를 넘는'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제안으로 여기에는 시장 실패 등 특수한 상황에서 역내외 기업의 데이터 개방 강제가 가능 • 거대 기업, 플랫폼 기업 등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견제(정지형 외, 2020)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19.1.16) •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허브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 데이터·AI 융합 촉진 - AI 국가전략(‘19.12.17) • AI 생태계 구축 및 활용 제고: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디지털 정부 구현 등 • 사람 중심의 AI 구현: 일자리 안전망 구축,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 마련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수립(‘20.6.22) :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20.7.14)

※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장효성(2019)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디지털 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수립하는 제도 및 정책이 국제 규범에 반영되고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미국, EU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까지 자국 내에서 수립한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관련 법, 사이버 보안법 등을 국제적으로 규범화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주목
- 데이터가 중요한 생산요소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글로벌 독과점화 방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데이터 및 플랫폼 독점규제는 물론, 최소한 국내 기업과 국민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함
- 디지털 기술과 관련 있는 첨단기술 지원정책, 지재권 정책, 인재 정책 등 광범위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므로 기업 경쟁력을 포함한 국력과 정부의 협상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한 중국의 기술지원제도를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
 -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지원, 대미 첨단기술 인수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와 우려의 시각을 제기함⁷⁰⁾
 -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정책을 통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며, 이는 시장원리를 위반하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훼손
 - ‘중국제조 2025’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특정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보조금정책은 심각한 과잉생산 문제를 야기하고 글로벌 시장을 왜곡
 - 미국의 첨단기술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한 중국의 대미 투자와 같은 불공정 정책에 대해 WTO 제소로 대응할 필요성 제기
 - 중국 정부 주도의 미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투자를 경제침략으로 인식
 - 중국을 사이버 경제스파이 활동 위협국가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제재 필요성 제기

70) 연원호·나수염·박민숙·김영선,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경쟁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6.24. p.12. 여기서 검토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① USTR 「301조 조사결과 보고서(2018. 3. 22)」 ②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2020. 3. 31)」 ③ USTR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2020. 3. 6)」 ④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중국 시장왜곡에 대한 할만 교수 청문회 보고서(2018. 6. 8)」 ⑤ 백악관, 「중국의 경제 침략에 관한 보고서(2018. 6. 19)」 ⑥ 국가방첩보안센터(NCSC), 「해외 사이버경제스파이 보고서」.

- 미국은 중국의 과학기술경쟁력을 가장 경계하면서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도
 - ※ 2018년 OECD 자료 기준으로 미국은 일본, 독일, 한국, 인도, 프랑스 등 주요 우방 6개국의 R&D가 전 세계 R&D의 50%(중국은 세계의 26%)가 넘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들 국가와의 기술 제휴를 강조
- 디지털 기술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대부분 민군겸용기술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감시자 기능을 강화하는 행태도 주목해야 함
 - 중국은 일대일로(BRI) 전략으로 통신 및 위성 서비스를 결합한 잠수함과 국경을 초월한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ICT 인프라를 원격으로 감지하고 있음
 - 일대일로의 디지털 구성요소는 전자상거래 및 인공지능에서 중국이 통제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의 일부로서 인공위성과 스마트 시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방안을 모색

(2) 과학기술 경쟁력 배양

- 미국과 중국은 무역분쟁, 화웨이 사태, 군사 충돌 등의 위기를 조성하는 한편으로 과학기술 및 인재가 미래 사회 패권을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투자와 적극적인 기술 보호 전략을 구사
 - 앞에서 살펴본 백악관 보고서(2020.5.)에도 미국은 중국의 시장을 왜곡하는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관행 등 기술을 둘러싼 중국의 행태가 미·중 갈등의 근본 원인임을 분명히 함
 - 중국 지도층도 모든 기술이 점차 미·중 경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기술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표출
 - "향후 10년 안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경쟁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시작될 것" (인민대 학장 진 칸룽(Jin Canrong))
 - "과학적, 기술적 역량은 한 나라의 종합적 힘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 또 위대한 권력 경쟁의 싸움터가 되었다."(난징대 교수 주펑(Zhu Feng))
-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견디며 기술혁신을 가속한다면 조만간 과학기술 패권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미·중이 과학기술을 양분한다면 제3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임
 - 코로나19 이전에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은 미국 내 정치적 목적,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패권 약화가 거론되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 안위가 중요해지면서



기술력 중심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

- 글로벌 기술 리더로서 미국과 중국의 이미지 경쟁에도 주목해야 함
 - 중국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미국을 앞설 수 있는 위치라는 주장
 - 중국은 ① R&D 중점투자, ② 중국의 야망을 뒷받침하는 우수한 기관과 산업정책, ③ 제조능력과 글로벌 공급망으로서 중심성, ④ 핵심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강력한 운영 등 4가지에 장점
 - 중국 지도자들은 향후 10년 동안 누가 다음 산업혁명을 주도하느냐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진핑은 “향후 10년은 핵심 10년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정보, 생명공학 등 새로운 기술혁명과 산업변화가 힘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기술로 비약적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이 레거시 시스템을 우회하고 경쟁자들을 추월할 수 있다고 함⁷¹⁾
 -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강화, 정부역할 조정, 이민 및 기초과학정책 수정, 기업 및 재정적 인센티브 개혁, 이해관계자 협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⁷²⁾
- 정부 직접투자 R&D를 산업정책의 수단적인 의미에서 다루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전환 리더십 확보라는 독립된 기술정책체계 속에서 중점기술 육성 필요
 - (미국) 기초 R&D에 대한 투자 강화 필요성 제기⁷³⁾
 - AI, 양자, 유전공학, 자율시스템, 사이버, 우주 등 새로운 기술개발 선언과 기초 연구의 우수성 재창조가 시급하다는 인식
 - ※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연구센터 설립과 지원에 향후 5년 동안 약 10억달러(1조 1,860억원) 투입 결정(2020.8.27. 시타임스 보도)

71) Qiushi [求是网], “What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Xi Jinping described the blueprint like this! [第四次工业革命什么样? 习近平这样描绘蓝图!].” July 27, 2018.

http://www.qstheory.cn/zhuanqu/2018-07/27/c_1123186013.htm

72) Rush Doshi(Director, China Strategy Initiative, Fellow - Foreign Policy,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contest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stimony(미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증언), 2020.7.31.

73) Rush Doshi(Director, China Strategy Initiative, Fellow - Foreign Policy,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contest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stimony(미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증언), 2020.7.31. 등 다양한 보고서와 연설문에서 지속적으로 정부 R&D 강화를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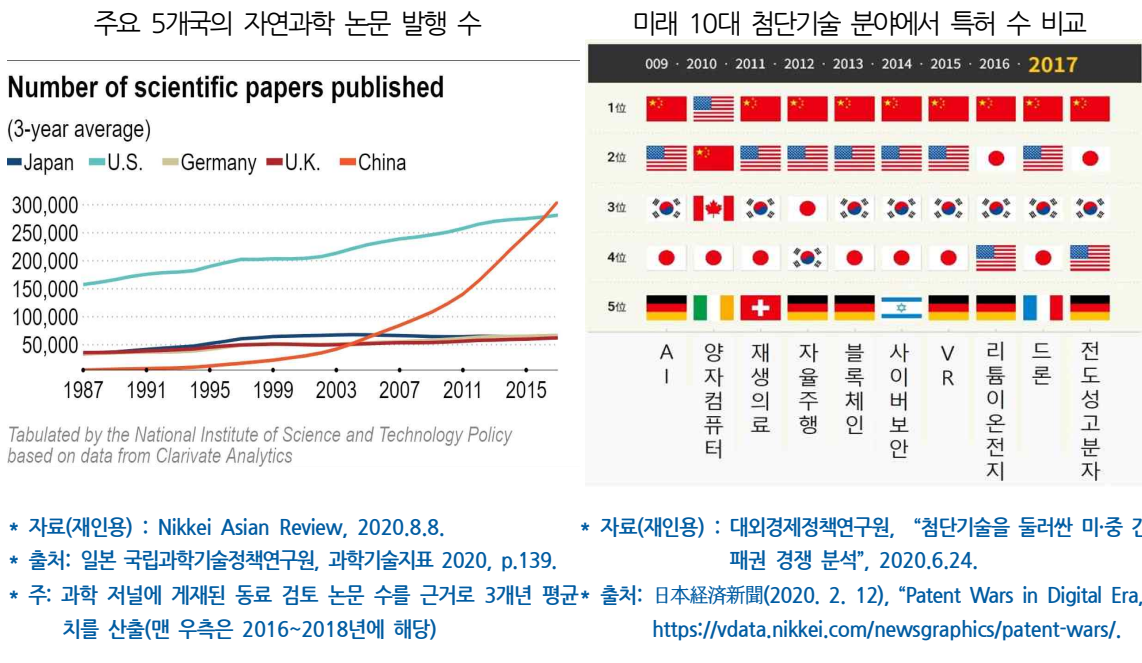
- ※ AI양자컴퓨팅 분야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내년도 AI양자정보과학 예산(비국방 부문)을 올해 17억 달러보다 약 30% 늘어난 22억 달러로 증액하는 방안 추진 중
- 연방기금으로 R&D를 활성화,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장기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벤처 자본을 창출하는 기초 기술을 창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 연방기금 R&D는 냉전시대 2%에서 최근에 GDP의 0.7%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기업 R&D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조세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 제조업을 위한 대책으로는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운용하는 중국의 산업정책을 참고하여 미국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제기 : 보조금, 세금 우대, 교육 훈련 투자, 지역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조달정책의 사용, 국가 의무생산(예: 국방물자생산법⁷⁴⁾), 국내 제조를 유리하게 하는 치밀하게 구조화된 무역 협정 및 수출 통제 검토 등
- (EU) 공동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EU 경제회복기금을 디지털 경제 전환에 중점 투자
 - 5G 통신망 등 통신 인프라와 AI, 사이버보안, 슈퍼컴퓨팅, 클라우드 등 전략적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촉진할 공동 데이터 공간(common data space) 구축 등 데이터 경제 구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
- 기술주권 확보만이 미·중 양강의 위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인식 필요
 - 미국의 입장에서 미·중 갈등의 핵심은 결국 중국의 과학기술경쟁력과 국가시스템이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이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과학기술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것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본질이라고 인식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바이오·의약 기술, 비대면 사회 및 미래 인프라산업 선도를 위한 기술 등 R&D 강화만이 아니라 이민정책, 유학정책 등도 이슈화
 - 미 의회는 고속런 미국 이민을 촉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인재 유인책 마련 등 논의
 - ※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 * 중국은 R&D 투자 및 과학논문 산출⁷⁵⁾ 면에서 미국을 위협

74)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은 국가안보 등을 근거로 대통령이 민간기업 등에 주요 물품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육류 작업장 폐쇄가 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단백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육류작업장에도 적용하여 의무 가동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2020.4.28.).



- * 중국의 R&D 연구자 수는 2018년 기준 약 187만 명으로 세계 1위
- * R&D 지출도 빠르게 성장하여 1위인 미국을 거의 따라잡은 상황: 2018년 기준 R&D 지출은 중국이 5,540억달러, 미국이 5,810억달러(미국은 5% 증가에 그친 반면에 중국은 10% 증가)
- * 과학논문 점유율은 중국이 19.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18.3%로 2위
 - 2016~2018년 평균 중국은 30만5927편의 논문, 미국은 28만1487편의 논문을 발표
 - 2017년 기준 상위 10%의 논문 중 미국이 24.7%, 중국은 22%의 점유율로 근소한 차이
 - 중국은 재료 과학, 화학, 공학, 컴퓨터 과학, 수학 분야, 미국은 임상 의학과 기초생명과학에 주력
- 2020년 2월 일본경제신문이 발표한 「디지털 시대의 특허전쟁(Patent Wars in Digital Era)」 연구는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조사한 미래 첨단기술 10대 분야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특허 수 비교를 통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그림 5. 참조)
- 특허 수만 고려하면 중국은 10개 분야 중 양자컴퓨터를 제외한 9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6개 분야에서 일본을 앞선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75) Nikkei Asian Review, 2020.8.8.

(3) 디지털 핵심 산업 확보

-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특성, 제도 특성, ICT 산업 특성, 연구개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국가 통합적 디지털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
 -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과 핵심 산업 연결
 - 중소기업 지원 등 분산된 자원 투입구조 재정비
 -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핵심(king pin) 산업이 미흡한 상황에서 AI, 데이터 등 거대기술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새로운 선단형 연구 필요
 - 응용기술 개발은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으나, 거대기술 및 기초기술은 정부 주도의 장기적 R&D 프로그램 필요
-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한 재조명 추세가 있음을 직시하고, ICT 분야에서 여전히 정부 주도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관점 필요
 - (미국) 제도적으로 중국을 따라 하기보다는 미국의 특성을 살려 대응 탄력성, 경쟁력, 안보,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
 -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금융, 자동차, 보험 산업 등을 살리기 위해 개입했으나, 첨단산업인 5G, 반도체 등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을 실수로 생각
 - 단기간 내 제조업 기반 확충, 표준화 주도력,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이 중요 과제이며, 한·중·일의 산업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중국) 중국 지도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장악하기 위해 산업정책 프로그램을 주도⁷⁶⁾
 -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중국 전인대는 5G와 스마트시티에 집중 투자하고, 5G를 산업과 융합시켜 스마트 제조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승인. 중국은 2020년 말에 50만 개 이상의 5G 기지국을 건설하며 최종 500만 개 건설⁷⁷⁾

76) Xinhua [新华网], "Li Keqiang: The Internet + Double Innovation + Made in China 2025 Will Give Birth to a 'New Industrial Revolution' [李克强：互联网+双创+中国制造2025催生一场“新工业革命”].” October 15, 2015.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5-10/15/c_1116825589.htm

77) Anjani Trivedi, "China Is Winning the Trillion-Dollar 5G War," Washington Post, July 12,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china-is-winning-the-trillion-dollar-5g-war/2020/07/12/876cb2f6-c493-11ea-a825-8722004e4150_story.html



- 2030년까지 AI 주도권, 2035년까지의 표준 설정 등 100여 가지 과학기술 계획을 발표⁷⁸⁾하고 다양한 특수목적기금을 운영
-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는 정보기술, 스마트제조, 항공우주, 해양공학, 첨단철도, 전기자동차, 전기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품, 농기계, 장비 등 10개 첨단산업 포함
- 중국의 학자들은 비록 미국이 중국에 비해 뛰어난 혁신 능력이 있을지라도 다양한 대규모 산업 제조 능력이 없으면 강점 발휘가 어렵다고 보며, 세계 제조업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중앙집중성을 거대한 전략적 이점으로 판단
- 5G 보급 확산 및 6G 주도권 확보 경쟁 가속화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사회 구축을 위한 초고속·초연결·저지연 5G 서비스 보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각국이 보유한 특허와 글로벌 가치사슬 상의 지위가 경쟁 무기화
 - 미국의 화웨이 제재(앞의 미·중 충돌 부분 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내 5G 보급에 박차
 -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은 6G 기술 선점을 위해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부 R&D 개시
-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활동 필요
 -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이 맞물려 있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만드는 것과 혁신기술 분야의 기술표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새로운 국제규범의 대상으로는 국제경제 붕괴 및 재정 파탄 대응, 코로나19 극복 협력과 세계 필수산업 유지, 디지털산업의 승자독식 탈피, 인간사회의 새로운 가치 정립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중국이 세계질서와 국제규범을 어겼다는 미국의 주장과, 미국이 주도했던 ‘규칙 기반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미국 스스로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78) Tai Ming Cheung et al., Planning for Innovation: Understanding China’s Plans for Technological, Energy, Industrial, and Defense Development (Washington, DC: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6), <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Planning%20for%20Innovation%20-%20Understanding%20China's%20Plans%20for%20Tech%20Energy%20Industrial%20and%20Defense%20Development072816.pdf>

바꾸려 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 새로운 국제규범 정립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대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작으며-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며-, 기술표준과 관련해서는 기초기술과 원천기술이 강한 양국의 입김이 거셀 것으로 예상

※ 최근 미 의회는 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국내 노력과⁷⁹⁾ 미국과 미국의 주요 동맹국 및 협력국 간의 기초 과학 연구 협력 확대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 공유, 투명성, 재현성 및 연구 무결성에 관한 표준과 가치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⁸⁰⁾

-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산업 전환과 관련된 신기술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와 저항 극복, 새로운 규범 마련과 관련한 협력, 디지털 서비스의 국경 없는 공급 확대, 글로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 가능

※ 1950년대 냉전시대 이후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져 세계화가 진전되었고, 1999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가 생겨난 것을 상기할 때,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 공감대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국제협력은 시도될 것으로 판단됨

- 오늘날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느 한 나라가 주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해서 결국은 진영싸움으로 변질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리더십이 실종되는 기술의 발칸화를 예측하기도 함

● 기술표준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점

- 기술표준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가 가동되고 있고, 중국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인 상황이므로 앞으로는 미국의 견제가 매우 강해질 것으로 예상

· 과학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세계질서의 표준 쟁취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 표준 2035 프로젝트(2020)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글로벌 표준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정보기술(IT)과 통신표준을 다루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도 대거 참여

※ 중국은 특허 사용 시 로열티 획득과 기술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음

79) 백악관 OSTP는 미국 정보 관련 조직과 NIST, 상공, 법무 및 국방부를 총괄하고, 미국 산업계와도 협의하는 '기술표준 관련 부처간 실무그룹'을 설립하는 것을 건의

80) Alison Snyder, "Allies could shift U.S.-China scientific balance of power," Axios, June 18, 2020,

<https://www.axios.com/scientific-research-expenditures-america-china-743755fe-3e94-4cd3-92cf-ea9eb1268ec2.html>



- 3GPP,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키워 왔으며, 5G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막대한 로열티 확보를 예상
- ZTE는 생체인식 데이터를 저장하여 안면인식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아키텍처 표준을 제안했으며, 이는 감시, 검열, 통제에 유용한 기술임⁸¹⁾
- 미국은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개발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기술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4) 세계 디지털 전환 협력 주도

● 코로나19 극복과 디지털 전환 협력

- 코로나19로 강화된 정부 역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등으로 각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세 예상⁸²⁾
-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대
 - AI, 5G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통신장비 등 ICT 교역이 확대되면서 위축된 글로벌 교역을 만회
 - ICT 서비스 혁신으로 교육, 의료, 문화콘텐츠 등 글로벌 교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와 개방적인 문화 형성에 국가 간 협력 필요
- 비대면·비접촉,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 이중구조⁸³⁾ 심화 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그 이행과정과 대책에 대한 국가 간 협력 필요
- 온난화에 따른 바이러스 창궐 우려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국가 간 협력
- 바이러스 감염률이 낮고, 방역체제가 좋은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과 인력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

81) Lindsay Gorman, "The U.S. Needs to Get in the Standards Game—With Like-Minded Democracies," Lawfare, April 2, 2020,

<https://www.lawfareblog.com/us-needs-get-standards-game%E2%80%94-minded-democracies>

82) 한국은행 조사국,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2020.6.

83) 부문 간 고용 격차와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

-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당분간은 비대면·비접촉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경제와 사회 유지를 위한 디지털 전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
 - 현재 상태의 점진적 회복과 진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박차
 - ‘강한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한 국가 파탄의 위험⁸⁴⁾을 해소할 새로운 해법 제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행정시스템 및 사회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
 - 실물경제 붕괴가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지 필요
 - 경제 성장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당분간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
 - ※ 예를 들면, 지난 8월 시점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대내외 경제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소비 관련 지표도 일부 반등한 것으로⁸⁵⁾ 나타남
 - 코로나19가 경제주체의 가치관과 행태 변화, 탈세계화, 디지털경제 가속화, 저탄소 및 저소비 경제 이행 등 새로운 양상을 가져오고 사안도 복잡하게 얽히게 하고 있으므로 세계 시스템 유지를 위한 국가 간 협의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
 -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규범, 국제 규범도 새롭게 형성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미국과 중국의 주도 가능성을 보더라도 체제·이념의 차이, 기업의 독점성, 사회의 개방성, 산업의 고른 선도력, 국제적 신뢰 등 여러 측면에서 역량 부족이 관찰됨
 - 자본주의의 존속, 자유주의 국제규범이 존속하려면 이데올로기 논쟁이나 글로벌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 선도 필요
 - ※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는 작동하되 미국과 중국의 이데올로기 분열이 일어난다면 디지털 플랫폼은 2개로 쪼개질 수 있음(5G, 빅데이터, AI, 양자컴퓨터, 북두/GPS, 디지털화된 인프라 등)⁸⁶⁾ 기술 활용 촉진
- 일상에서 ‘비상 상태를 대비한 국가 디지털시스템(Digital Contingency System) 구축, 모델화

84) 조경엽, “큰 정부의 경제·사회적 영향”, KERI,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 2020.7.15.

85)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2020.8.

86) 이희옥(성균관대),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국회 입법조사처 세미나, 2020.7.28.



- 바이러스 감염의 일상화, 상시 군사충돌 위험, 사회 시스템 붕괴, 미지의 위험 등을 대비한 비상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R&D 투자 절실
- 핵심 ICT는 민·군 겸용기술이기도 하며,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디지털 기술이 좌우
- ※ 디지털 트윈, 사이버 보안, 스마트 시티 및 공동체, 대체 통신망, CPS, 국가 인공지능 컨트롤 플랫폼 등을 활용한 디지털 비상시스템 구축

(5) 글로벌 디지털 공공재 이슈 선점

● 글로벌 디지털 공공재⁸⁷⁾ 논의 필요성

-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가장 큰 전략은 중국의 제조업 기반과 수요시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미국의 전략은 기술력과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우방국과 합종연횡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제3국 입장에서 지금까지 경제와 안보는 이해관계에 따른 적절한 전략의 선택과 조화가 가능하였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즉 미국과 중국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발생
 - ※ 기술방식, 플랫폼, SW의 선택 문제에 직면하고, 플랫폼 운영방식이 이데올로기 다툼과 연결된다면 안보와 경제 문제를 절대 분리할 수 없음 : 현재 운영체제(OS), 반도체 등의 예
- 우선으로 미·중 충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공공재 논의 필요
 - 디지털 공공재를 이용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경우(외국으로부터 구입), 또는 데이터 이용 동의, 광고 수신 등 반대급부가 따라야 하는 경우
 - 반도체나 디지털 서비스플랫폼으로서 공공재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간재인 경우, 희토류와 같은 첨단제품 재료 등
 -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하는 인터넷 인프라, 인터넷 포털 등 공공재 성격의 다양한 재화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

87) 한 국가 안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디지털 재화로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경우를 디지털 공공재라고 할 수 있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공공재, 필수재, 필수인력 논의와 연계 가능
- 글로벌 플랫폼 독점화 대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경제사회적으로 현 상황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규정하며, 독점적 ICT 기술이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 글로벌 공룡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불안감 상존
 - ICT 생태계는 GVC로 연결되어 있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점으로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깔때기 구조
 -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은 해당 국가에 내는 세금, 주주에 이익 환원 외에 초과 수익을 더 넓게 공유(기부 등)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주장 가능
 - ※ 미국에서 GAFA 독점과 관련하여 디지털기업에 부합하는 새로운 독점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의회 청문 출석(2020.8)이 있었으며, EU 의회도 조만간 GAFA에 출석 증언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짐
 - ※ 미 의회는 핵심산업에서 선두 기업 간 경쟁이 미국을 유리하게 하면서,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품질의 제품, 산업 탄력성, 더 큰 혁신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독점규제 필요성을 인식: 그러나 이면에 조세 징수, 달러 패권 등의 이해가 깔린 것으로 추측
 - 중국이 경쟁적인 플랫폼 운영국가가 되려면 중국 경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따라야 함
 - ※ 중국이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른 자유주의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는 세계의 디지털 플랫폼이 여러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음

(6) 국제기구 및 협력체 활용역량 강화

- 마·중 갈등 구도가 세계질서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능동적 사고 필요
 - 인류의 분열과 대립은 오랜 역사 속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대립 구도 중에서 양 강구도는 적절한 긴장감으로 제3국에 대한 압박과 유인을 통해 이들 그룹과 격차 벌리기가 용이
 - 중국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기침체가 깊어질수록 경제구조의 변화압박은 커질 것이므로 중국 정부(공산당)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며, 세계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협이 존재
 - 성장의 둔화, 무역수지 악화, 자본시장 개방 압박도 중국 정부에게는 커다란 위협



-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극대화하면서, 다자주의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날카로우나 양국의 협력 또한 절실한 상황
 - 무역과 산업, 기후변화, 전염병, 데이터 등 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음
 - ※ 미국이 막대한 군비 지출의 대가로 다양한 특권을 누려왔듯이, 미국과 중국은 자유무역 질서하에서 GVC 작동이라는 혜택을 누려온 구조가 당장 깨지기는 어려움
- 데이터·인공지능 및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팬데믹 극복 및 과학기술 활용 등 새로운 국제기구 및 협의체 생성과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안보 및 경제 공동체 제안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중요
 - 중국은 WTO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등 선진국을 상대로 무역분쟁을 제기하였으며, 세계은행 의제 설정 등 국제경제기구의 지배구조와 도구를 잘 활용해 왔음
 - 또한 다자협력체제 형성에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등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RCEP을 성사시키기도 함
- 안보와 연계되거나 분리되는 경제협력 사안에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국내 기업의 디지털 필수재 및 공공재 공급능력과 기초기술 역량 확보 필요
 - 미국과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 화해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안보 문제가 계속해서 남게 되므로 국제적으로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협력전략 모색
 - 다른 나라들이 안보를 빌미로 경제를 압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디지털 기술과 재화 분야에서 킥핀을 늘려가야 함
 - 미국의 IPR 정책과 중국의 수요시장 및 다른 나라의 수요시장을 연결하는 디지털 필수재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국제협력 사안과 연결하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전략 필요
 - 인류의 존재와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필수재 및 디지털 공공재 논의는 안보 이해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 코로나19 백신의 신뢰도가 낮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당분간 개발되지 못한다면 비접촉 사회 등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이므로 코로나19 극복과 연계된 국제협력을 전개

- 우리나라 ICT 기업도 인도적인 코로나 극복 및 디지털 전환사업에 참여해야 함
 - ‘자신과 타인’, ‘우리과 그들’을 구별하여 제한된 자원과 이익을 놓고 경쟁을 하는 한, 물리적 장벽과 디지털 장벽이 함께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방과 소통의 촉진이라는 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추구하여 공생의 방법을 찾아야 함
 - ※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사례
 - * 유네스코는 재택교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세계교육연합(Global Education Coalition)’을 발족(2020.3.26)했으며, GSMA를 비롯해 MS·구글·페이스북 등 다수의 IT 기업이 협력
 - * 세계보건기구(WHO)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코로나19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 : MS, IBM, 오라클을 비롯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기업 하세라(Hacera)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책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개방형 데이터플랫폼 ‘미파사⁸⁸⁾’ 구축에 착수⁸⁹⁾
 - *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전염병 발생 추이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⁹⁰⁾
- 디지털화를 통한 완벽한 분리와 재조합, 부도덕한 가설과 기술적 구현 등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허상에 대한 인류 공동의 대책 마련을 위한 첨단 기술력 확보 필요
 - 현실 세계의 장벽(인종차별, 혐오, 이민, 난민, 민족주의, 정치적 분열, 테러, 국경·계층 분리 등) 해소를 위한 디지털 전환과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범 마련에 기술력이 리더십으로 작용
 - ※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세계화의 진전,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블록체인의 등장 등 물리적인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인류 역사의 오랜 프레임인 ‘민족과 국가’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해 새로운 장벽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상기

88) 하세라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미파사(MiPasa)’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한 경보와 진단, 확진자 관리가 목표

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No. 165(2020.4.24.)

90) WEF, Insights on handling coronavirus from an earlier report on business and outbreaks((‘20.3.)



V 시사점

본 연구는 점점 더 심각한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미국과 중국의 G2 패권 경쟁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럽의 결속력은 더욱 약화하고 중요한 디지털 기술의 종주국으로 미국의 위상과 세계 최대의 수요시장으로서 중국의 위상, 그리고 이들의 막강한 군사력에 맞설 힘은 당분간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 파트너로서 부상하였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 의미가 있는 정도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으로 국제관계가 진영으로 나뉘는 한편으로, 상당수의 국가는 미·중 양 진영의 협력체에 교차 참여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존재로 인하여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이원적 전략 구사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인식하에 코로나19와 미·중 충돌, 글로벌 장벽이라는 세계질서 변화요인과 디지털 전환을 접목하여 대한민국이 ICT 강점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일상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가속화되는 디지털 혁신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비접촉사회로의 이행, 코로나 진단과 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ICT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고, 미·중 충돌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확대는 국가 간의 질서, 즉 국제질서를 매우 심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된다. 관세 등 경제 문제 충돌은 이제 기술 분쟁으로, 인권과 이념과 체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를 결부시키는 미국의 다자주의 전환과 중국 고립화 전략은 제3국의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할 전망이다.

세계질서 측면에서 국가 간 물리적 장벽, 사회 계층 간 양극화, 민족주의 포퓰리즘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데이터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더 많은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더 많은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들이다.

코로나19와 세계질서의 변화, 디지털 전환이 공유하는 지향점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혁명의 도래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규범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유와 통제 사이에 새로운 균형’이 생성될 것이다. 그 과정을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통칭한다면 그것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힘이 존재할 것이다. 점점 더 빠르게 정보가 유통 및 공유되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기계로 대체되고 기계가 인간사회에 끼어드는 세상에서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국력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기술로 개인과 사회의 모습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며, 그 주체들을 지키는 기술적 힘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국력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른 변화요인과 상호작용을 한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진행 방향과 미·중 충돌, 그리고 다양한 국가·사회적 갈등과 상호작용을 하며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로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디지털 리더십이며, 본고는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리더십의 구성 요소와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개념 제안단계에 불과하지만, ‘국가 차원의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미·중 양강 구도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다. 앞에서 정리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제3자의 힘을 제한하는 양강구도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드러난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기존의 질서를 고착화할 수도 있지만, 제3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이데올로기와 체제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결국 힘의 원천은 기술력이라는 인식이 드러났으며, 디지털 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양국 간 견제가 치열한 가운데 디지털 기술과 산업을 개입시켜 다른 나라들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모습도 보인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어려운 선택지 앞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 ICT를 바탕으로 국가가 국민과 기업을 지키고 중립국⁹¹⁾처럼 누구에게나 선택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한 결과로 6가지 국가 디지털 리더십 역할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기술 주권 확립, 과학기술 경쟁력 배양,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는 그동안 일반화된 이슈로서 여기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상황과 다른 나라의 특이사항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세계 디지털 전환 협력 주도, 글로벌 공공재 이슈 선점, 국제기구 및 협력체 활용역량 강화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키워드를 정하고 필요성과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았다.

91) 역사적으로 스위스가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백년 동안 유지된 강력한 전투력과 세계 대전 속에서도 유럽지역에서 널리 통용된 스위스 프랑의 힘이었던다는 평가가 있음



이미 데이터·AI 경제활성화전략, AI 국가전략,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지능화와 디지털 전환 관련한 많은 정책이 발표되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혁신비서관 등 조직도 신설되었지만,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독립된 장기 계획으로 디지털 전환을 다루는 여건은 부족하다.

디지털 리더십은 기술결정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관점의 제안이지만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분명 생각해 볼 개념이다.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변화무쌍하게 전개될 G2 패권 경쟁과 진영 형성, 다자주의의 확대와 복잡화,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강력한 기회와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내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20.4.),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No. 165.
- 김예경 (2020.7.) 미·중 갈등 현황과 한국의 대응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세미나
- 김한권 (2020.8.), COVID-19 발생 이후 중국 외교정책의 현안과 미·중관계의 함의, 외교안보연
구소 주요 국제문제분석 2020-24
- 동아시아연구원 (2020.8.),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Special Report
- 박성욱 (2020.7.), 주요국의 코로나 위기 대응 경제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금
융브리프, (제29권4호)
- 배영자 (2020.7.), 미중 기술 패권경쟁(미국 관점)과 한국의 전략, 국회 입법조사처 세미나
- 양평섭 (2020.11.), 미국의 탈중국화 전략과 중국의 대응,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No.178.
- 연원호·나수엽·박민숙·김영선 (2020.6.),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 오명호 (2020.10.), 21세기의 세계질서: 변환과 미래, 박영사
- 이은영 (2020.6.), 최근 화웨이 제재로 본 미·중 디커플링 동향, KDB산업은행, Weekly KDB
Report
- 이춘근 (2012.11.),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KERI
- 이상현 (2020.7.), 미국의 대중국 전략: '경쟁적 접근' 함의와 파장,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 이태규 (2020.7.), 탈세계화와 한국경제, KERI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
나
- 이희욱 (2020.7.),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국회 입법조사처 세미나



- 장윤종 (2020.7.), 미중 충돌의 세갈래 길, 선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고문
- 장효성 (2019), 주요국의 인공지능정책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Spot Issue
- 조경엽 (2020.7.), 큰 정부의 경제·사회적 영향, KERI 세미나
- 조경엽 (2019), 한·일 무역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KERI Brief 2019-09
- 조규산 (2020), 정부보고자료,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재경관
- KDI (2020.8.), 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토론회자료, “코로나19와 미중갈등, 그리고 한반도”
- KDI (2020), 경제동향, 각호
- KDI (2020), 월간 나라경제, 각호
- KOTRA (2020.8.),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대응방안
- KOTRA (2020.8.), 워싱턴 통상정보,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 한국은행 조사국 (2020.6.),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 한국수출입은행 (2020.8.),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와 미·중 갈등 심화, 이슈보고서
- 디지털데일리 보도자료(kwonhy@ddaily.co.kr 기자 등) 각호
- Anatole Kaletsky (2010), 자본주의 4.0(Capitalism 4.0), 위선주 역, 컬처앤스토리
- Economy Insight (2020.8.), “미국 해체가 시작되다” (Die Zeit 2020년 25호 번역 기사)
- George Freidman (2020),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Flash points)」, 김앤김복스, pp.269~270.
- Jared Diamond (2005), 총, 균, 쇠 - Guns, Germs, and Steel: The Fates of Human Societies, 김진준 역, 문학사상사
- Klaus Schwab (2016),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새로운현재
- Tim Marshall (2020), 「장벽의 시대」, 이병철 옮김, 바다출판사

◆ 국외자료

- Alison Snyder (2020.6.), “Allies could shift U.S.–China scientific balance of power,” Axios <https://www.axios.com/scientific-research-expenditures-america-china-743755fe-3e94-4cd3-92cf-ea9eb1268ec2.html>
- Foreign Policy(2020. 5. 22.), “China has Two Paths to Global Domination,” <https://foreignpolicy.com/2020/05/22/china-superpower-two-paths-global-domination-cold-war/>
- Mckinsey&Company (2020), “Could the next normal emerge from Asia?”
- Lindsay Gorman (2020.4.2.), “The U.S. Needs to Get in the Standards Game—With Like-Minded Democracies,” Lawfare, <https://www.lawfareblog.com/us-needs-get-standards-game%E2%80%94-minded-democracies>
- Michael Brown, Eric Chewning, and Pavneet Singh (2020.4.), “Preparing The UNITED STATES For The Superpower Marathon With CHINA”, Global China
- Nikkei Asian Review (2020.8.8.)
- Reuters (2020.5.1.), “Trump threatens new tariffs on China in retaliation for coronavirus.” <https://www.theguardian.com/world/live/2020/sep/16/coronavirus-live-news-world-still-at-beginning-of-pandemic-who-covid-19-envoy-warns?page=with:block-5f61435b8f08bc8778ef1456#block-5f61435b8f08bc8778ef1456>
- The White House (2020.5.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Report-5.20.20.pdf>
- National Security Advisor Robert O’Brien (2020.6.26.),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deology and Global Ambitions,” Speech, Arizona Commerce Authority, Phoenix, Arizona,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chinese-communist-partys-ideology-global-ambitions/>
- FBI Director Christopher Wray (2020.7.7.), “The Threat Po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th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Speech, Hudson Institute, Washington D.C. <https://www.fbi.gov/news/speeches/the-threat-posed-by-the-chinesegovernment-and-the-chinese-comm>



unist-party-to-the-economic-and-nationalsecurity-of-the-united-states

Attorney General William Barr (2020.7.17.), “Remarks on China Policy,” Speech, General R. Ford Presidential Museum, Grand Rapids, <https://www.justice.gov/opa/speech/transcript-attorney-general-barr-s-remarkschina-policy-gerald-r-ford-presidential-museum>

Secretary of State Michael Pompeo (2020.7.23.),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Speech, The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Yorba Linda, California, <https://www.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

Secretary of State Michael Pompeo (2020.7.13.), Statement on “U.S. Position on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U.S. State Department, <https://www.state.gov/u-s-position-on-maritime-claims-in-the-south-china-sea/>

Anjani Trivedi (2020.7.12.), “China Is Winning the Trillion-Dollar 5G War,”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china-is-winning-the-trillion-dollar-5g-war/2020/07/12/876cb2f6-c493-11ea-a825-8722004e4150_story.html

Anthony H. Cordesman (2020.8.3.) , “From Competition to Confrontation with China: The Major Shift in U.S. Policy” <https://www.csis.org/analysis/competition-confrontation-china-major-shift-us-policy>

U.S. Department of the State, The Clean Network, <https://www.state.gov/the-clean-network/>

Rush Doshi(Director, China Strategy Initiative, Fellow – Foreign Policy,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2020.7.31.),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contest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stimony

Washington Post(2020.5.28), “Bank Sanctions, delistings: U.S. poised to take financial fight to China”

WEF(20.3.), Insights on handling coronavirus from an earlier report on business and outbreaks

The White House(2020.3.6), “Order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Stayntouch,

Inc. by Beijing Shiji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日本經濟新聞(2020.2.12), “Patent Wars in Digital Era,”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patent-wars/>.

Qiushi [求是网] (2019.7.27.), “What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Xi Jinping described the blueprint like this! [第四次工业革命什么样? 习近平这样描绘蓝图!].”, http://www.qstheory.cn/zhuantiqu/2018-07/27/c_1123186013.htm

Xinhua [新华网] (2015.10.15.), “Li Keqiang: The Internet + Double Innovation + Made in China 2025 Will Give Birth to a ‘New Industrial Revolution’ [李克强: 互联网+双创+中国制造2025催生一场“新工业革命”].”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5-10/15/c_1116825589.htm

Tai Ming Cheung et al. (2016), Planning for Innovation: Understanding China’s Plans for Technological, Energy, Industrial, and Defense Development (Washington, DC: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Planning%20for%20Innovation%20-%20Understanding%20China's%20Plans%20for%20Tech%20Energy%20Industrial%20and%20Defense%20Development072816.pdf>



저자소개

정성영 ETRI 지능융합연구소 기술정책연구본부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원
e-mail: jsykt@etri.re.kr Tel. 042-860-6521

코로나19 시대의 세계질서 변화와 디지털 리더십

발행인 이 지 형

발행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융합연구소 기술정책연구본부

발행일 2020년 12월



www.etri.re.kr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TEL. (042) 860-6114 FAX. (042) 860-6504

